

제362회 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8년7월25일(수)

장 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

- 가. 외교부
- 나. 외교부 산하기관
 -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교류재단
 - 재외동포재단
 - 한·아프리카재단

상정된 안건

1. 업무보고 2

- 가. 외교부
- 나. 외교부 산하기관
 -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교류재단
 - 재외동포재단
 - 한·아프리카재단

(14시03분 개의)

○위원장 강석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한반도 정세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핵심 결집돌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프로세스가 약 10년 만에 재가동하게 되었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이어 온 불신과 대립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등 많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쉽지 않은 대·내외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진전된 한반도 정세가 조성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외교의 적지 않은 성과이자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물을 도출해야만 하는 우리에게 현재의 상황이 결코 녹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추가 협상에서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 등 의미 있는 결과가 없어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많은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북핵 문제 해결 또는 평화체제 구축 문제 외에도 우리 외교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경제외교 강화 문제, 한미 방위비 분담의 합리적 결론 도출 문제, 또한 외교 지평 확대를 위한 신북방 및 신남방 정책의 구체화 문제, 난민 등 국제 인권에 대한 책임성 강화 문제 등 여러 현안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어느 하나 해

법 마련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특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논의 과정에서는 간극을 메울 수 없을 정도의 난관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정부 측에서도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는 점을 재인식하시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녕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국익에 부합하는 최선의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20대 국회 후반기 외교통일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되었고 전환기적 시점에 한반도의 미래와 직결된 많은 외교적 이슈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정부 측에서는 우리 위원회와의 소통 강화에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모여서 우리 외교 정책들도 입법적 뒷받침과 함께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 속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업무보고

가. 외교부

나. 외교부 산하기관

-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교류재단
- 재외동포재단
- 한·아프리카재단

(14시06분)

○위원장 강석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외교부와 4개 외교부 산하기관 순서로 실시를 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로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의 경우는 해외 출장 중인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출석 하는 대신에 송진호 사회적가치경영본부장이 대리출석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양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강석호 예, 말씀하십시오.

○정양석 위원 정양석 위원입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첫 외교통일위원회가 열리는 이 시점에 KOICA 이사장께서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참 유감스럽습니다. 장관께서도 일정을 조정해서 오늘 첫 상견례 겸 업무보고

가 있는데 KOICA 이사장은 국회 경험도 많은 또 국회 사정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해외 출장을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는 것은 혹시 국회를 무시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지극히 유감스럽고, 위원장님께서는 KOICA의 감독기관인 외교부로 하여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의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KOICA는 예산 과다 전용이라든가 또 무원칙한 인사 선발·운용 이런 문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지만 감독기관인 외교부가 효과적으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도 예산 집행과 인력 운용에 관해서 효과적으로 심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처럼 이렇게 산하기관과 외교부가 함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는 외교부 현안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하부기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이 점을 감안하셔서 KOICA나 KF, 재외동포재단 등 외교부 산하기관에 대해서 외교부는 별도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석호 예, 잘 알겠습니다.

장관님,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호 그러면 강경화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 그리고 간부 소개, 이어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0대 국회 후반기 외교통일위원회가 구성된 것을 축하드리며 첫 전체회의에서 외교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출석한 외교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제 국립외교원장입니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참고로 1차관은 총리 해외 순방 수행차 또 2차관은 방미 출장차 이미 잡혀 있었던 외교 일정상이 자리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나머지 간부 소개는 이미 배포해

드린 참석 간부 명단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외교부 조직·인력·예산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외교부 본부 및 국립외교원 그리고 164개 재외공관에서 현재 224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2조 2700억 원 수준입니다.

그러나 우리 외교의 지평이 급속도로 넓어지고 있고 외교 현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을 비롯한 외교부의 인력과 예산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해외여행객과 교역 규모가 각각 7배와 4배 이상 증가한 데 반해 외교부 인력은 겨우 18%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재외공관 중 절반 이상이 5인 이하 소규모 공관이며 본부 직원도 만성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외교부 예산도 2015년 2조 원을 넘긴 이래 조금씩 늘고 있지만 정부 전체 예산의 0.75%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 강화를 포함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적절한 규모의 조직과 인력,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료 2쪽 업무 추진 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마련된 소중한 대화의 모멘텀을 활용하여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 그리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본격화하여 우리 외교 지평을 확대하고 유럽·중남미·아중동 지역과의 협력도 늘려 나가겠습니다.

평화·안보·개발·인권 등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국익을 증진하기 위한 경제외교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외교센터와 해외안전지킴센터 설치 등 국민과의 접점을 넓혀 가면서 국민과 함께 하

는 외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그리면 외교부 각 분야별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입니다.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그리고 센토사 합의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한 만큼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 나가는 가운데 북·미 간 비핵화 관련 구체 합의가 도출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 간 협의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미 간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을 거둘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북·미 양측이 인내심을 갖고 협상에 임할 것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설득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시켜 가겠습니다. 즉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를 함께 진전시키면서 비핵화와 평화 정책을 견인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남북대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대화는 결코 따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의 여러 합의 사항들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제재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유엔 등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지속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의 건설적 역할을 독려하고 국제사회 전반과의 공조를 지속해 가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도 남·북·미 정상들의 의지가 확인된 만큼 구체적 조치들이 비핵화 진전에 맞추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국과도 긴밀히 협의해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 4쪽 주변 4국 외교입니다.

북핵 등 한반도 문제를 풀어 가는 데 있어서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조율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 정상은 신정부 출범 이후 이미 네 차례 회담과 함께 수시로 전화 협의를 가졌으며 저도 폼페이오 장관과 수

시로 만나거나 통화하면서 북핵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미 양국 간 정상 및 외교장관을 포함해서 각급에서 긴밀하고 전략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 공조를 지속하고 미 조야의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정책공공외교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당면 현안별로 살펴보면 우선 북한 북핵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성과를 토대로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공조하에 북측의 남북·북미 정상 회담 후속 조치 이행을 견인해 나가는 한편 남북 관계 진전과 북·미 관계 개선 간 선순환을 도모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 비핵화 추동을 위한 선제적인 신뢰 구축 조치로서 일부 훈련의 유예를 결정하였으며 추가 연합훈련 유예는 북한의 성의 있는 비핵화 지속 여부에 따라서 한미 군 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주한미군 관련 사항은 동맹 차원의 문제로서 북한과의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한미 공동의 전략 메시지를 지속 발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 협의와 관련해서는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 결과를 도출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통상 현안 관련 미 측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국익과 국제 규범 등 원칙에 기반하여 호혜적인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한중 관계는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 말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통해 한중 간 신뢰 회복과 관계 정상화의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방중 이후 활발히 가동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대화 채널을 통해 양국 간 교류 협력 또한 차근차근 회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를 바탕으로 각급에서의 전략대화를 활성화하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인적·인문 교류 확대를 통해 양국 관계가 보다 실질적이고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중국 내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중국 측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정상과 고위급 등 각급에서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상반기 복원된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본격화될 수 있도록 정상 간 양자 상호 방문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발표 20주년 계기를 활용하여 양국 간 실질 협력 구체화 노력도 지속 경주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노력에 더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 및 민감 현안에 대한 관리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러시아와는 금년 6월 있었던 대통령 국빈 방러를 통해 강화된 정상 간 신뢰 및 우호 관계를 기반으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번영을 위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유도하며 남·북·러 삼각 협력 등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래 성장 동력과 극동 지역 실질 협력 증진 등 합의 사항의 충실히 이행을 통해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의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변 4국과의 양자 관계 강화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다자협력도 추진하여 역내 대화와 협력의 관행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차료 8쪽 지역외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4강 외교를 넘어서 외교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를 신남방 정책 추진의 원년으로 삼고 아세안과 활발한 정상외교를 주축으로 3개의 P, 즉 People, Prosperity, Peace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우리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과 6월 필리핀 대통령의 공식 방한 그리고 이달 초 우리 대통령의 인도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등 일련의 정상외교를 통해 아세안 및 인도를 아우르는 신남방 정책 추진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ARF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통해 역내 정치·안보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 대한 지지를 확보해 나갈 예정

입니다.

신북방 정책 관련해서는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과의 호혜적 연계를 통해 ‘9개 다리 분야’ 협력 등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신북방 정책의 또 다른 축인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는 에너지, 교통, 보건의료, ICT 등 호혜적 분야를 위주로 고위급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협력을 심화해 나가겠습니다.

유럽과는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이후에도 정상 및 고위급 인사 교류를 통한 양자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예정된 ASEM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계기를 통해서도 미래성장 동력 발굴, 지역 및 글로벌 이슈 등 분야에서 EU 및 유럽 주요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남미 지역과 관련해서는 G20 정상회의, 주요국 대선 등 계기를 활용하여 고위 인사 교류를 확대하고 미수교국인 쿠바와의 실질적 관계 개선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아중동 지역과 관련해서는 특히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관련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등 급변하는 중동 정세에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6월 출범한 한·아프리카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높아지고 있는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는 한편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진정성 있는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12쪽 다자 및 글로벌 외교입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글로벌 외교 강화를 통해 다양한 국제 현안 해결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국제 평화·안보 분야에서는 레바논, 남수단 등에 유엔 평화유지군을 지속 파견하고 유엔 평화구축위원회에서 부의장으로 활동하는 등 유엔 평화 활동 및 관련 논의에 지속 참여함으로써 2024년~25년 임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이버 안보, 테러, 폭력적 극단주의 등 글로벌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을 증진하고 군축·비확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기여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인권을 포함한 국제 인권 보호 증진 논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한편 ‘여성과 함

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 추진 등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인권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 다자 안보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 대외 정책에 대한 지지 기반을 다지고 우리 국민들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을 통해 유엔 등 주요 국제기구 내 우리 입지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우리 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이 외교·안보·경제·사회 분야 협력 등 대외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여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은 물론 우리 국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시민사회, 기업 등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개발 성과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5쪽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정부는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과의 고위급 경제협의체를 개최하여 정상 외교 성과를 제고하고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한편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미·중 간 무역 갈등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남방 정책 구현을 위해 국가별 맞춤형 경제협력 방안 마련 등 아세안, 인도와의 경제협력 확대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 그리고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노력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금년 말 타결을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의 이행규칙 마련을 위한 후속 협상에 참여하고 전 지구적 기후변화, 환경 문제 대응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자료 17쪽 국민외교와 관련해서 지난 5월 개소한 국민외교센터를 적극 활용하여서 우리 외교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 또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공공외교와 관련해서는 작년 수립된 공공외교 5개년 기본계획 또 2018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통합적·체계적 공공외교 시행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산사(山寺), 한국의 산지승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는데 우리 유산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19쪽 재외국민 보호 그리고 영사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설치한 해외안전지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재외공관 사건·사고 담당 영사 인력을 확충하여 해외 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외국민 보호의 법률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법 제정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 전자행정시스템인 G4K(Government for overseas Koreans)를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다국어로 번역된 행정문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현지 사정에 맞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외교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외교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외교 인프라를 확충하고 외교 역량을 더욱 발휘할 수 있도록 20대 국회 후반기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우리 외교의 새로운 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호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진호 한국국제협력단 가치경영본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협력단사회적가치경영본부장 송진호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오늘 20대 국회의 외교통일위원회 후반기 첫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에서 KOICA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이미경 이사장이 첫 번째 위원회에 참석을 할 수 없게 된 것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지금 남미 출장 중인데 오늘 아침에 페루의 부통령과 양국 간의 양자 원조에 관한 회의가 잡혀 있어서 부득이 외교적인 관계 때문에 오늘 위원회에 불참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KOICA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우용 사업전략·아시아본부장입니다.

백숙희 아프리카·중동·중남미본부장입니다. KOICA에서는 처음으로 여성 상임이사가 되신 분입니다.

(간부 인사)

그리고 설경훈 글로벌파트너십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앉아 계시다가 뉴스로 확인하셨습니다마는 라오스에서 어제 탬이 붕괴되고 그 범람에 의해 가지고 민관합동 해외 긴급 재난대책회의가 지금 외교부에서 소집이 되어서 긴급히 이식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에서 3쪽까지의 KOICA의 조직·예산 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래서 KOICA의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첫 번째로 KOICA는 2018-2023 5년간 이행할 신 중장기 경영목표를 재수립하여 글로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 개발협력 대표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과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기관의 경영 전략에 반영하고 KOICA의 혁신 10대 과제를 이행하는 이행 체계를 구축하여 조직 내 혁신을 내재화하겠습니다.

KOICA는 올해 2월 혁신 10대 과제를 발표한 후 혁신 이행 전담기구인 혁신추진단을 설립하여 조직 내 혁신 이행 체계를 마련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7월 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혁신 과제를 구현하는 조직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가치를 기관 경영 전반에 실현하고 지역 중심, 현장 중심의 사업 수행 체제로 전환하여 지역사회의 참여 활성화와 국별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두 번째로 KOICA는 국제원조 규범에 부응한 무상 ODA를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협력대상국의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지원은 KOICA의 중요한 사업 목표이며 과제입니다. 빈곤 감소, 보건, 교육, 농촌 개발 등 우리의 경쟁력이 높은 분야와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전 지구적인 과제와 평화, 인권, 민주주의와 성평등과 같은 범분야 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개도국의 취약성 극복과 인도적 지원 확대를 촉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 번째로 KOICA는 정부 외교정책에 부응하는 무상 ODA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으로서 신남방 정책 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세안 지역 무상원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가치 실현과 청년의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KOICA는 창의적 혁신 기술 프로그램인 CTS(Creative Technology Solution)를 더욱 발전시켜 개발협력 분야에 청년 기업, 스타트업 기업, 사회적 기업 육성을 확대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청년의 개발협력사업의 주체적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청년 개발협력 분야 인재 양성 관련하여 WFK 봉사단, 영프로페셔널, 다자협력전문가, 개발협력 코디네이터 등 KOICA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재들이 경쟁력 있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력 사다리를 제공하여 국제개발협력 경력 개발과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네 번째로 민간 기업의 참여 확대, 시민사회 및 국제기구와의 포괄적 파트너십의 증진을 통해서 개발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국제 원조 사업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이 강조되고 포용적인 성장, 포괄적인 파트너십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KOICA는 민간의 혁신성 및 창의성과 융·복합하는 개발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시민사회 수요를 분석한 맞춤형 지원, 상생형 민관협력 플랫폼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의 다자간 협력 전략, KOICA의 분야별 전략과의 연계사업을 확대함으로써 다자 협력 파트너와의 국제적 공조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0쪽에서 22쪽에 있는 금년도 사업 추진계획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별 협력사업은 총예산 3736억 원 규모로 4개 지역 원조 사업으로 구성하여 중점적으로 협력 국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쪽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원조 예산입니다. 1519억 원이며 베트남·인도네시아·캄보디아·필리핀·라오스·미얀마 등 12개 국가를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아프리카 지역 원조 예산은 1120억 원이며 에티오피아·모잠비크·르완다·우간다·탄자니아 등 7개 국가 등을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13쪽, 중남미 지역 원조 예산은 559억 원이며 콜롬비아·페루·볼리비아·파라과이 등 4개국을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14쪽에, 중동·중앙아시아 지역 원조 예산은 538억 원이며 우즈베키스탄·이라크·팔레스타인 등 4개국을 중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원조 사업은 각 국가별로 프로젝트와 개발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경제·사회적 정책 및 제도 수립, 역량 배양과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주요 사업입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개도국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 서비스 개선 사업, 교육 향상을 위한 학교 건립 및 직업훈련원 건립 사업, 우리의 IT 기술을 접목한 전자정부 구축 사업, 재생에너지 개발 및 수자원 개발 관리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 인재 양성 사업은 우리 청·장년들이 개도국에 파견되어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각종 분야에서 봉사 활동을 통해 경제·사회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지역의 언어·문화 등을 습득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KOICA 봉사단 2471명, IT 봉사단 440명, 청년봉사단 1664명, WFK자문단 240명, 과학기술지원단 48명, 글로벌협력의료진 25명, 영프로페셔널 청년인턴 630명, 다자협력전문가 40명, 개발협력 코디네이터 48명 등 총 5606명의 청년·장년들을 53개국 개도국에 파견하여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당초 계획한 인원보다 봉사단 255명, 개발협력 코디네이터 36명, 다자협력전문가 5명 등 총 296명을 추가로 파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국제개발협력 인재 양성 사업들에 보다 많은 기회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7쪽입니다.

글로벌연수 사업은 개도국의 정책입안자, 공무원, 기술인력 등 인사를 초청하여 연수프로그램

을 실시함으로써 개도국 역량을 강화하면서 우호 협력 관계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44개 연수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총 4314 명을 초청하여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국제기구 협력사업입니다.

이는 양자 간 협력사업으로 직접 지원이 어려운 사업을 국제기구 등 다자간 기구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양자 간 사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유니세프 아동지원 사업 등 10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33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9쪽 혁신적 개발협력 프로그램은 ODA와 과학기술 접목, 시장형 비즈니스 접목, 해외 타 공여기관이나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등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 개발 효과성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작년 195억 원 대비 34억 원을 증액한 229억 원의 예산으로 우리의 청년기업, 스타트업기업, 사회적기업 등과 협업하여 개도국을 지원하는 창의적 가치 창출 프로그램 등을 확대 시행 중입니다.

20쪽입니다.

외교부로부터 위탁받은 보조금 사업인 인도적 지원 사업은 790억 원 규모의 해외 재난 대응 및 긴급구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협력사업은 시민사회, 연구기관 및 대학 등과 총 113개 사업에 329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 국제질병퇴치기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에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이 발효되어 그간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사업을 대체한 사업입니다.

현재 KOICA는 총 852억 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출연금으로 약 40억 원을 개도국 감염병 등 질병 예방 및 퇴치 활동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OICA 혁신 추진과 새로운 전략, 사업 추진 내용 등 업무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KOICA는 어느 때보다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에 맞춘 새로운 전략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쉽지 않은 도전적 과제이지만 KOICA 직원들

은 금번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여 원조의 철학을 바로세우고 KOICA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KOICA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형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간부 소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이시형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이시형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한국국제교류재단 2018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 상근이사 두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영필 기획협력이사입니다.

김성인 교류 협력이사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상근이사 두 사람은 지난 6월 1일 자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재단은 한국을 대표하는 공공외교 전문기관, 국민과 함께 세계와 소통하는 공공외교 전문기관으로서 다양한 공공외교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반도 안보 지형의 변화에 맞추어서 미국이나 중국을 비롯한 주변 주요국에 대해 정책공공외교를 강화하고 아세안, 인도 등과 다양한 형태의 교류 사업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정부의 외교 다변화 기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희 재단은 지난 2010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한 결정에 따라서 7월 12일 자 제주도 서귀포시로 본부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재단은 지방 이전의 취지를 살려서 국제평화의 섬 제주에 기여하는 한편 제주 본부, 서울 글로벌센터, 부산 아세안문화원 활동을 통해서 보다 다채로운 국제 교류 사업을 계속해서 펼쳐 나가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 조직과 예산 등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

여 주신다면 배포된 자료 1페이지부터 9페이지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10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글로벌 한국학 진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외 대학에 한국학 기반을 조성하여 지한 인사를 배출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예산 123억 원으로서 총 68개국 180개 대학에 한국학 그리고 한국어 강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지난 1월 전 세계 대학의 한국학 강좌, 교원 현황 등을 망라한 해외 한국학 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각국의 한국학 발전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대학 한국학 교수직 설치 그리고 석사·박사 과정생 대상 사업 강화 등을 통해서 차세대 해외 한국전문가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객원교수 파견을 비롯한 다양한 한국학 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자료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페이지 국제협력 네트워킹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사 교류, 해외 정책연구 및 민간단체 지원, 포럼 및 지역 협력사업 그리고 공공외교 기반 확대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177억 원입니다.

먼저 글로벌 인사 교류 사업은 해외 유력 인사 그리고 차세대 지도자 등을 초청하는 사업으로서 100여 개국으로부터 640명 정도 금년에 초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이하 20페이지에 있는 해외 주요 정책연구소의 한국 관련 연구 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17개국 60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미국 의회 내에 현직 연방 상하원 의원들로 구성된 한국 연구 모임인 ‘코리아 스터디 의원그룹’을 발족하도록 하여 의원외교 기반을 강화하는 데 저희 재단이 기여한 바 있습니다.

20페이지, 포럼 및 지역협력과 관련하여 금년도에는 모두 16건 포럼과 세미나를 진행하였거나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 공공외교 기반 확대를 위해 금년에 공공외교 아카데미 사업을 신설하고 대학생, 자체 국제 교류 업무 담당 공무원 등 일반 국민들의 공공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공공외교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3페이지, 글로벌 협력 강화 사업은 외교 현안에 대해서 상대국 정책 전문가 및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국가별 전략사업입니다. 글로벌 이슈에 대한 협력 강화 그리고 우리 외교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작년에 저희 재단 내부에 설치된 한중양아협력사무국을 통해서 북방협력의 파트너인 중국아 5개국과의 인적 네트워크 강화 등 실질 협력사업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이하 문화 교류 및 미디어 사업은 한국의 문화예술을 해외에 알리는 사업,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외국의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해외에 한국 관련 출판물을 지원하는 사업, 세계시민센터를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115억 원입니다.

그 가운데 31페이지의 한국 아세안문화원은 아세안 국가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아세안 간 쌍방향 문화·학술·인적 교류를 강화하기 위하여 작년 9월에 개원하였습니다. 금년에는 40여 건의 교류 사업을 통해서 정부의 신남방 정책 추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세계시민센터 지원 사업은 세계시민 교육, 여성·청년 역량 강화 활동 등을 추진하는 세계시민센터를 활용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단과 센터 간에 MOU가 지난 1월에 체결되었고 센터 측으로부터 세부 사업계획을 접수받아서 현재 검토 중입니다. 조만간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제주 시대를 맞이한 저희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내부 혁신 TF를 현재 운영 중입니다. 업무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공공외교 전문기관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한우성입니다.

제20대 국회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재외동포재단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영훈 기획이사이입니다.

다음은 기준 사업이사이입니다.

(간부 인사)

재외동포재단은 1997년 설립 이후 글로벌 한민족 공동체 구현의 중심 기관이라는 비전 아래서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정체성과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의 모범적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재외동포 사회는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재단은 앞으로 740만 재외동포 사회가 모국과 호혜적 관계를 구축하는 견인차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동포 사회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재단 본부의 제주 이전 등 여러 대내외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재단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2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단은 재외동포재단법을 근거로 1997년 10월 설립되었으며 현재 정원 67명, 613억 원의 예산으로 동포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18년 전략 목표 및 추진 과제입니다.

저희 재단은 글로벌 한민족 공동체 구현의 중심기관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첫째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둘째 모국과 동포 사회 간 교류 협력 증진 및 상생 발전 도모, 셋째 한·베 다문화 취약 가정 자녀들과 차세대 해외 입양 동포 등 인권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 동포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는 사업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재외동포 교육 사업입니다.

재외동포들의 정체성 함양을 위해 전 세계 약 1800개 한글학교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한글학교 교사 대상 맞춤형 연수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차세대 해외 입양 동포 대상 프로그램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 환경이 열악한 중국과 CIS 지역은 현지 실정을 고려하여 교육기자재 지원과 전문강사 파견 확대 등을 통해 교육 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2쪽, 재외동포 교류 지원 사업입니다.

전 세계 한인회 등 약 700개의 재외동포단체가 시행하는 다양한 활동 지원과 한인회관 건립 등의 숙원사업 지원을 통해 거주국에서의 정착과 권익 신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CIS 지역의 경우 고려인 동포의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과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한인회장대회, 유공 동포 모국 방문 등 동포 사회 지도자 초청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모국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14~15쪽, 재외동포 차세대 사업입니다.

모국과 동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차세대 리더의 발굴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100명의 국내외 차세대 리더가 함께 하는 세계한인차세대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 사업 내실화와 사후관리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000여 명의 국내외 젊은이들이 참여하는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 연수 시행을 통해 차세대 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글로벌 차세대 리더로서의 성장을 돋고 있습니다.

15~17페이지, 한상네트워크 사업입니다.

국내외 경제인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을 위해 매년 세계한상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내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해외 진출 기회 제공을 위해 한상기업 청년 채용 인턴십 프로그램을 연간 150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원을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상이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는 금년도 사업의 실체입니다.

마지막으로 별지로 배포해 드린 저희 재단의

중장기 전략사업과 한 가지 건의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 교과서 1학년부터 6학년 전 학년, 전 과목 교과서를 보면 ‘재외동포’ 또는 ‘해외동포’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교과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재단은 청와대 및 교육부의 교육정책 입안자들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인권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 동포 지원 사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저희 재단의 입장에서는 지난 2009년 제9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결정으로 저희 재단은 차세대 입양 동포 사업을 하도록 돼 있으나 그동안 예산 배정이 없어서 전혀 손을 대지 못한 실정입니다.

재단은 앞으로 한·베 다문화 취약 가정 자녀와 차세대 해외 입양 동포 등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된 동포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사업 발굴 등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해방 이후 지금까지 재외동포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기념관 또는 박물관 같은 시설이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재단은 이번 3·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동포들의 염원 사업이기도 한 가칭 ‘대한민국 재외동포 기념관’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현재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라는 명칭으로 100주년기념사업위원회에서 추진 중이며, 재외동포들의 역사가 담긴 박물관과 아카이브, 교육·연수 기능을 포함하고, 재단의 제주도 이전에 따른 동포 사회와의 물리적 접점 약화에 대응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은 1997년 10월에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후 IMF 사태가 한국을 덮쳤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재단은 원래의 설립 취지와 달리 건강한 국가기관으로서 균형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187개국에 거주하는 743만 명의 재외동포를 정원 67명의 인원이 봉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재외동포들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재단이 건강한 국가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국 위원 잠깐만요, 지금 3·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 예,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아프리카재단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지난 6월 25일 출범한 한·아프리카재단은 2017년 10월 31일 제정된 한·아프리카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오늘 업무보고가 우리 위원회에 대한 재단의 첫 공식 보고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최연호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아프리카재단이사장 최연호 존경하는 강석호 위원장님, 따뜻한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0대 후반기 첫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하여 지난 6월 출범한 한·아프리카재단의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의 임원 한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연 상근이사입니다.

(간부 인사)

국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아프리카의 중요성에 대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한·아프리카재단이 지난달 개소식과 함께 외교부의 네 번째 산하기관으로 공식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는 정치·외교뿐 아니라 향후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기회의 대륙으로 그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는 우리 대한민국에게 외교·경제·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한 밀접한 파트너로 협력 관계를 전폭적으로 강화해 나갈 대상입니다.

한·아프리카재단은 우리나라 유일의 아프리카 전문기관으로서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해 수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주어진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배포해 드린 한·아프리카재단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막 출범해서 조직을 다지다 보니까 아직 자료도 저희가 이렇게 프린트 아웃 한 걸로 준비했습니다. 좀 미흡한 점 사과드립니다.

먼저 자료 1쪽 재단의 연혁 및 설립 목적, 조직 및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 10월 말 한·아프리카재단법이 공포된 후 설립을 준비해 왔고 지난 6월 12일 설립 등기와 더불어 25일 개소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재단의 설립 목적은 재단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아프리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활동과 다방면의 교류를 통한 아프리카 국가와의 동반자 관계 증진입니다.

지난 4월 경력 및 신입 직원 총 17명을 공개채용을 통해 채용 완료하였으며 6월 11일부터 임직원 19명 전원이 근무를 개시하였습니다. 이사회 또한 구성 완료되었습니다.

저희 아프리카재단 조직은 교류 협력부·연구 교육부·운영지원실, 총 3개의 부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17억 원입니다. 이 중 사업비는 2억 원으로 11.8% 비중입니다.

다음은 자료 2쪽 재단의 중점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관련 종합적인 정보를 우리 국민들이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 종합 정보 허브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아프리카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짧고 역동적인 아프리카 대륙에 상응하여 우리 스타트업 청년 기업가 등 차세대들의 아프리카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설립 첫해인 만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 및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업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주요사업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 먼저 기업 및 민간단체의 애프리카 국가와의 교류 협력 지원입니다.

재단은 국내 주요 경제단체, 주한 공관과 협력

하여 아프리카 지역에 특화된 경제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달 아프리카벤자유무역지대 소개 및 아프리카 기업 진출 환경 등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를 주한 아프리카 외교단, 전경련과 공동으로 성황리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하고 심층적인 아프리카 관련 연구 자료를 토대로 청년 스타트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확대를 위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주아프리카 우리 공관, 주한 아프리카 공관들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많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 아프리카 국가와의 상호 교류와 이해 증진을 위한 전문 플랫폼 구축 및 교육 홍보입니다.

먼저 국내 아프리카 유경험자들을 모아 아프리카 동창회를 결성하고 이들의 노하우를 분야별·지역별로 축적 관리하고 이를 대아프리카 외교 전략 및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 전문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 특히 청년들에게 아프리카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제고 및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한·아프리카 청년포럼 및 모의아프리카연합 회의를 개최하고 차세대 아프리카 전문가 육성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아프리카 국별·권역별 동향 파악 및 연구·조사입니다.

재단은 아프리카 지역의 최신 동향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정보를 수요자들에게 적기에 제공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재단은 이미 '아프리카 투데이' 제하로 아프리카 주요 현지 이슈, 정치·경제·문화 등을 매일 이메일을 통해 100여 명의 구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구독층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프리카 55개국에 대한 핵심 정보를 망라한 한눈에 보는 아프리카 책자를 금월 중에 발간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는 올 한 해 아프리카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향후 우리의 대아프리카 외교 전략 및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학술 포럼도 개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4쪽, 아프리카 국가와의 동반

자 관계 증진을 위한 교류 지원입니다.

아프리카 국가의 특성상 고위급 인사 교류를 통한 관계 증진 및 공공부문 간 교류 확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 아프리카재단 포럼 활동을 중심으로 의원외교 지원, 지자체·아프리카 간 교류 확대를 도모하여 이러한 교류가 민간 교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을 경험한 주요 아프리카 인사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민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하 상세 사항은 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저희 한·아프리카재단은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상생 협력의 플랫폼으로서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다양한 교류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는 물론 아프리카와의 동반자 관계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외교의 다변화에 기여하는 한편, 기업을 포함한 민간 영역의 아프리카 진출을 지원하고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막 발걸음을 뗀 신생 기관으로 여러분으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국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됩니까?

○위원장 강석호 예, 말씀하십시오.

○정병국 위원 잠깐만 계세요.

내년 예산을 편성했나요?

○한·아프리카재단이사장 최연호 예, 지금 신청을 해서 기재부에서 심의 과정에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 내년 예산에서 사업비가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어요?

○한·아프리카재단이사장 최연호 저희가 신청한 것은 한 15억 신청을 했는데요, 지금 기재부 2차 심의가 끝났는데 3억 증액돼서 현재 5억으로 돼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재단이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데……

○한·아프리카재단이사장 최연호 예, 맞습니다.

○정병국 위원 인건비가 더 많고 경상비가 더 많은데 재단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한·아프리카재단이사장 최연호 그러기 위해서 지금 기재부에 예산 교섭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외통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석호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여러 가지 사항은 본인 질의시간에 하시고요, 자료 요청 같으면 지금 하셔도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한·아프리카재단이사장 최연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호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질의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외교부와 외교부 산하기관에 대해서 일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의 질의는 답변시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우리 모든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3월에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때 기무사에서 계엄령에 대한 조치 사항을 준비한 문건이 발견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는 의례적으로 계엄에 대한 상황을 한번 해석해 본 것이다 이런 입장을 지금도 표하고 있고 기무사도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문건을 보면 이게 심각한 것이……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하도록 되어 있으지요, 장관님?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송영길 위원 되어 있는데 이 문건에 따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의원 설득 및 계엄 해제 건의 직권상정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여당을 통해서 계엄의 필요성 및 최단 기간 내 해제 등 약속을 통해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를 하고 해제 요구안 직권상정 차단 방안을 검토하고, 계엄사령부에서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 구속 수사, 엄중 처리 경고

문을 발표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정치활동 의원을 집중 검거 후에 사법 처리하는 것을 써 놓았어요.

이것은 사실상 헌법상의 계엄을 검토한 게 아니라 완전히 내란 목적의, 거의 내란 예비 음모 단계라고 보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과 관련해서는 국방부 또 기무사……

○송영길 위원 국방부가 판단할 문제인데……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어제 협안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런데 제가 장관님한테 여쭈어보는 것은 이게 외교부와 관련된 사안이라 그렇습니다.

주한 무관단·외신기자 대상으로 외교 활동 강화 항목에서는 외교부장관을 불러 가지고 주한미·중 대사 등 주요국 대상으로 현 소요 사태 관련 계엄 당위성을 설명하도록 하고, 장관은 주한 미 대사를 초청해서 미 본국에 계엄 시행을 인정토록 협조하고 외교부장관이 주요 국가 주한 사절단을 초청해서 계엄 시행을 지지하도록 요청한다는 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사실 기무사가 이렇게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할 때 외교부와 당국자와 상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세부적으로 조사를 한 바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들여다본 결과로는 외교부와는 이와 관련해서 협의가 있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좀 더 들여다보겠지만 당시에 외교부장관이라든가 외교부 간부와 이러한 계획을 하면서 참여를 요구했다거나 어떤 부탁을 했다는 증거나 정보는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송영길 위원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나타나겠지만 사실 원래 헌법 77조 1항에 따르면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상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기무사가 모든 국민이 폭력 사건 하나 없이 평화적으로 촛불을 들고했던 집회를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로 계엄을 검토한 것 자체도 문제인데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77조 5항에 따라 국회의원이 과반수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철저하게 아예 무산시키려고 이런 행위를 한 것은 분명한 내란 목적의 범죄행위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정말 이런 것을 검토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는 80년 5월 광주항쟁을 겪었던,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서, 만약에 정말 계엄이 됐으면 수많은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발생했을 텐데 생각할수록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의 수많은 이상한 일탈 행위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외교부가 법관들에게 외교 파견 편의를 제공하면서 일본 기업에 대한 피해자 개별 청구 소송을 외교부의 입장을 반영해 가지고 미뤄줬다는 기사가 나온 것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지금 외교부는 공식 입장이 뭡니까? 65년 한일협정에 따라서 모든 개인의 청구권이 다 없어졌다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그때 다 공통적으로 해결됐다는 판단입니까?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민관 합동 외교 문서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65년 합의로 해결이 됐다 하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하지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65년도에 이것이 논의된 것도 아니고, 위안부 문제는 결코 65년 합의로 협의가 됐다거나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2015년에 나온 그 합의는 우리 정부로서는 이 합의로서 해결되었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는 입장은 그 당시에 발표했습니다.

○송영길 위원 장관님, 잠깐만요. 강제징용에 대해서 개별적 청구권이 국가적 합의로 소멸됐다는 게 외교부의 입장이라는 것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지금 청구권에 대해서 민사소송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은 여기에서 발표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지금……

○송영길 위원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겠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영길 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대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재상고로 2013년도에 2012년도의 개인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판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잖아요. 스미토모, 미쓰이, 미쓰비시 같은 전범기업들에 강제로 끌려가서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노동을 하고 임금전표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이 개인청구권이 그때 군사 독재 정권의 잘못된 한일협약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청구권이 다 소멸됐다면 우리나라 국가가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대신 그때 일본 기업으로부터 받았던 것은 돌려줬어야지요. 국가는 그것을 받아다가 다른 데에 다 써 버리고 강제징용되어서 수많은 노동력을 착취당한 사람의 임금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한다면 이 국민들은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이것을 잘 안 챙기면?

대한민국 정부가 챙길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직접 우리 개인들이 이 전범기업에 대해서 임금청구소송을 하는 것을 막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외교상 문제가 된다? 아니, 어떻게 개인의 청구권…… 국가가 개인한테 위임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이 개인들한테 우리 대한민국 국가가 다 이런 식민지 강제징용 임금청구권을 위임 받아 가지고 합의한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법부에 계류 중인 사안이고, 우리 최고법원에 계류 중인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로서는 대법원의 요청에 따라서 2016년 11월에 외교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런데 장관님, 문제는 여기에서 양승태 대법원이 비겁하게 자기들의 상고법원 설치 문제와 자신들 법관들이 연수 갈 때 외교부로부터 특혜를 받는 것과 서로 간에 맞바꿔서 외교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런 청구권 소송을 자연시키지 않았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권력이라는 게……

왜 몽테스키외가 입법·사법·행정을 분리시켰습니까? 권력은 남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라고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보호시키고자 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핵심일진대 어떻게 사법부가 비겁하게 자신들의 기관 이기적인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서 청와대와 야합하고 외교부와 이렇게 법관들의 연수라는 자기들의 특혜를 위해서 이런 중요한 판결을 약합했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정말 믿을 데가 어디 있겠어요? 이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위원님, 사법부의 독립

성은 국가의 가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희 외교부도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에서 의견서를 요구했을 때는 거기에 충실히 국제법 원칙이라든가 적용 관행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그때 의견서에 정리가 됐습니다. 이번에 기사화가 된 법관 파견 등 그런 특혜 부분 관련해서 외교부와 어떤 협의가 있었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로는 근거가 없습니다.

○송영길 위원 총 지금 법관이 해외에 몇 명 파견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3명 파견되어 있는 것으로……

○송영길 위원 3명밖에 안 되어 있다고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것은 나중에 좀 자료를 줘 보십시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교부장관 강경화 알겠습니다.

○송영길 위원 아무튼 이 문제는 내부적으로 잘 점검해서 이런 사태를 미연에 막아서 우리 국가기관이 정말 국민을 상대로 이런 엄청난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외교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정병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강석호 예.

○정병국 위원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는데 라오스 댐 붕괴로 인해 가지고 6600명의 이재민이 생겼고 70명의 사망자, 200명의 실종자라는 엄청난 재난이 라오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한국의 EDCF 자금을 통해서 댐 사업이고 또 한국 기업이 시공을 했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 외교적인 문제로도 비화될 수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심혈을 기울이면서 하고 있는 공공외교적 차원에서의 ODA 사업에도 엄청나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데 오늘 장관님 보고에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파악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일단 보고를 받고 질의를 했으면 싶습니다. 관련되어서 질의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장관께서 보고해 주시고 질의를 계속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강석호 제가 아까 강경화 장관께 라오

스 관계 얘기를 했더니 현재 실상을 파악 중에 있다, 또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장관님, 거기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하게 보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질의 전에 이것부터 먼저 들어 볼까요?

(「잠깐 들어 보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한번 보고해 주시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요일 7월 23일 라오스 아타푸 주에 우리 기업, SK건설 그리고 한국서부발전 등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건설 중이었던 수력발전댐의 보조댐 5개 중에 가장 작은 네 번째 보조댐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라오스 정부 측의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여론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국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추가 피해 상황은 계속 파악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근로자, 기술자 50여 명 근무 중 또 KOICA 요원들이 그 지역에 몇 분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 사고가 나기 전에 소개를 해서 그분들한테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고 즉시 관계기관 사고대책 회의를 개최했고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또 오늘 아침 새벽에 주라오스대사를 현장에 급파했고 주라오스대사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또 기업들이 참여하는 24시간 비상대책반을 현지에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현황 파악 그리고 수습 대책을 마련 중이고 사고 상황 파악 그리고 라오스 정부와 구조, 복구 방안 등을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대통령께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구호 조치 강구를 지시하였고 외교부는 이에 따라서 해외긴급구호대 파견 그리고 구호물품·구호금 등 지원 대책을 신속히 이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에 해외긴급구호대 파견을 포함해서 우리 정부의 지원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가 개최 중이고요, 라오스 정부의 접수 의사가 확인되는 대로 긴급구호대가 파견될 수 있도록 군 수송기 또 구호 인원 등이 비상대기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강석호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무더위에 강경화 장관님과 외교부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시고, 이번에 새로이 출범한 한·아프리카재단 최연호 이사장님, 의욕적인 모습을 제가 확인했는데 앞으로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방금 라오스 재해와 관련해서 보고를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취한 조치는 굉장히 적절하고 시의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로…… 이게 우리 국가나 기업의 신임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그냥 가벼이 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잘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관님, 이게 법률 용어인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말씀 들어 보셨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김재경 위원 전세 든 사람한테 ‘너 집 비워 달라’라면 그 사람이 뭐라 하겠습니까? ‘전세금 달라’ 그러면, ‘나 전세금 주라’ 그러면 집주인은 ‘집을 비워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법률적으로 이게 동시에 이행이 되게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뜬금없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 북핵 문제가 마치 이런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기존에는 9월쯤 가지고 종전 선언이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니만 오늘 이게 확 당겨지면서 8월에, 어떤 언론에는 보면 한·미·북·중 4개국 당사국까지 지정을 했고, 또 청와대에서 그랬나요? 거기에는 당사자나 시기는 열어 놓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8월쯤 종전 선언이 됩니까? 준비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정부로서는 판문점 선언에 명시가 돼 있듯이 올해 안으로 종전 선언을 만들어 내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기에 종전 선언이 될 수 있도록 남북 또 관련국들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 또 어떤 형식으로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련 부의 협의가 진행이 돼야 되고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좀 곤란합니다.

○김재경 위원 지난주인가요, 장관님도 미국 갔다 오시고 정의용 실장도 비슷한 시기에 미국을 다녀왔잖아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김재경 위원 두 분의 미션이 각각 다른 것이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우리 정부의 입장은 같이 갖고 있지만 제 상대는 국무장관이고 안보실장의 상대는 그쪽의 불턴 보좌관이기 때문에 각급에서 소통을 늘 원활히 진행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서로 시간이 맞을 때 이런 면담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연치 않게 그렇게 같은 시기에 양쪽에서, 저는 뉴욕에서 또 정 실장은 DC에서 그런 소통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재경 위원 장관님은 주로 대북제재의 예외 문제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던데요. 맞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과의 협의 또 안보리 이사국들과의 브리핑에서 대북제재의 문제가 주안점이었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러면 정의용 실장은 이 종전선언이 그 미션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김재경 위원 뜬금없는 이야기들이 지금 막 나올 일은 없잖아요.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양 안보실장 사이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종전 선언의 문제도 양국 간 지속적인 협의의 주제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다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돌아가 가지고……

좋습니다. 종전 선언이 되면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무얼 담보 받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정부로서는 종전 선언은 그런 어떤 비핵화 대화를 계속 견인해 나가기 위한 신뢰 구축 또는 선의의 조치라는 생각에서 정치적인 선언의 성격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국민들 다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요. 게임이라는 게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한쪽에서만 계속 선의로 이렇게 하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 들어주고 그러

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우리의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국민들 앞에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번에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가서 김영철 만났을 때 세 가지 요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자세한 내용은 들었습니다.

○김재경 위원 모르시면 5당 원내대표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원내대표를 만난 미국의 스티븐 멀 차관보 대행인지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핵·미사일 소재지를 포함한 핵 프로그램 전체 리스트를 신고해라’ 그리고 타임테이블, ‘비핵화 타임테이블을 내놔라’ 그리고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이행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 우리는 경협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심지어 나아가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했지, 오늘 보니까 DMZ에서 GP 철수한다고 그러지, 도대체 이게 뭔가 형평에 맞지 않는 게임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장관님?

○외교부장관 강경화 정부는 북한하고의 판문점 선언 후속 이행을 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안에서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기본 원칙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래서 그 원칙이 뭐니까? 구체적인 원칙이 뭐냐고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안보리 제재의 틀에는 예외를 신청하고 예외를 심의해서 안보리 이사국들이 심의하는 그런 제재위원회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안보리 제재의 틀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에 명시가 된 여러 가지 남북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그 틀 안에서 이행을 해 나간다고 하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안보리 이사국들하고 대화를 한 게 이번 뉴욕 방문의 목적이었습니다만 그 예외의 인정, 예외 신청을 함께 있어서 이것이 대외……

○김재경 위원 장관님, 죄송한데요. 제가 시간이 제한이 돼 있어 가지고 장관님 말씀을 끝까지 못 듣는 데 대해서 양해를 구하면서……

제 질문의 요지하고 장관님 답변은 지금 전혀

방향이 맞지 않는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시에 행의 항변이라는 설명까지 해 가면서 3개국의 당사국들이 각자가 원하는 것을 동시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맞춰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미국은 지금 세 가지를 품페이오 장관이 북한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영철이 바로 그 자리에서 체제 보장하고 종전 선언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겁니다. 계속 우리는 주기만 할 것입니까? 경협, 경제 지원하고 훈련 중단하고 GP 철수하고…… 우리는 뭘 담보할 것입니까? 그것을 국민들 앞에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 시점쯤, 종전 선언이 되는 시점쯤 북한으로부터 뭘 확보할 수 있다고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야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북한으로서도 지금까지 핵 실험장을 폐기를 했고요. 또 보도에 나왔듯이 또 미국이 확인을 했듯이 미사일 실험장 또 발사대를 지금 폐기하는 조치로 들어간 것으로 또 그렇게 하겠다고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약속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조치들이 향후라도 그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의미 있는 조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경 위원** 좋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리고 판문점 합의는 양측이 합의한 사항들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측이 절실히 바라는 바고요. 또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군 통신선 복원이라든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라든가 이런 것은 양측에 공히 이득이 되는 그런 조치로서 판문점 합의에서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경 위원** 그러니까 우선 지금 뭘 해체하고 하는 것 그거 좋아요. 좋은데 그게 우리 측 분명한 요구 사항이었습니까?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디까지 요구를 할 것이라는 게 있어야지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합의 사항 거기에 대해서도 국민들한테 종전 선언이 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적어도 이것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명한 그런 입장을 준비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 중단, DMZ에서 GP 철수 이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형평성에 맞지 않고 우리 측에서 너무 빠른 거예요. 형평성이 지금 흐름에 맞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물론 외교부가 그것을 결정할 것은 아니지만 정부 차원의 속도 조절 내지는 형평성에 맞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 바라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석호** 답변 안 바란다고 하네요.

짧게 하십시오.

○**외교부장관 강경화** 북·미 간 협상 또 남북 간의 대화에 있어서 다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예단해서 우리가 꼭 이것을 이끌어내겠다 이렇게 미리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협상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GP 철수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은 국방부 측에서 그렇게 하도록 북측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보고를 드린 것 같고요. 종전 선언을 추진함에 있어서 북한에 대해서 또 미국에 대해서 어떠한 합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협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권 위원** 서울 강동을 출신 심재권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몇 개월간 남북관계의 개선 또 한반도 평화 상황, 놀라운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서 우리 외교부가 혁혁한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하면서 격려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아까 잠깐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우선 라오스 탐봉피부터 잠깐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업체가 시공에 참여했고 또 그게 ODA건 EDCF건 간에 우리의 기금이 거기에 투입이 됐고 이런 점에서 우리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정확한 사고 원인은 나중에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정부의 EDCF 자금은 총 공사비용 10억 불에 있어서 한 8000만 불 정도가 들어갔다는 것 같고요. 그 사업 주체는 태국 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작으로 우리 SK 그리고 서부발전이

들어간 상황이고 내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지금 거의 다 마친 상황에서 지난 며칠간 집중호우로 저수지의 물이 불어나면서 이 사고가 일어났다 이렇게……

○심재권 위원 장관님, 저도 시간 때문에……

어쨌든 우리 정부의 책임이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적 관점에서도 그렇고 실질적 사업 시행 측면에서도 그렇다고 봅니다.

우선 첫째는 인도적 지원, 실종자들 수색하는데 또 이재민들 구휼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권 위원 어제 제가 통일부의 의견도 물었습니다마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에 대해서 외교부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김 위원장이 국제사회에 의지를 명확히 또 문서화해서 미국 대통령과 서명한 그런 의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의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부분은 남아 있지만 그 의지의 진정성에 있어서는 지금은 그것을 의심해서 앞으로 그 협상에 임하는 우리 입장의 진정성이 라든가 인내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여된 상황에서 나간다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피력한 그 의지를 믿고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재권 위원 저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그 진정성에 대해서 적어도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믿고 함께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특별히 드리는 이유는 지난 몇 개월 간의 여러 변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에서부터 지금 모든 게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갖거나 회의를 갖거나 한다면 저는 아주 원천적인 문제 제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화가 조금 꼬이거나 또는 상호 약속한 내용들이 조금 천연되더라도 그것이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를 속이려고 한다든가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결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더 말씀 안 드리겠고요.

다만 며칠 전에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군 사

령관도 미국에서 있은 어떤 안보포럼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 진정성에 대한 믿음을 표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다음에 종전 선언, 정치적인 의미의 종전 선언이라고 조금은 가볍게 받아들이면서 쉽게 될 걸로 봤는데 그게 뜻밖의, 뭔가 잘 진척이 안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번 폼페이오 국무장관 평양 방문 시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상호 간에 언짢은 입장 표명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제오늘 우리 언론 보도에 8월 말, 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종전 선언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장관님 말씀 들으니까 서로 간 입장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인데 저는 그것은 원칙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종전 선언은 단순한 한 약속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4·27 판문점 선언 또 6·12 센토사 합의에서 밝힌, 명백히 한 그 세 가지, 즉 관계정상화,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하는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 이 셋 모두에 관련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전 선언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더 노력을 해 주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종전 선언에 관해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왜 미국 측에서 그것을 망설인다고 보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심재권 위원 종전 선언에 대해서 왜 미국 측에서 망설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미국 측의 협상 전략에 대해서 제가 해석을 하는 것은 마땅치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미국 측으로서는 비핵화 대화를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북으로 시작은 됐지만 앞으로 후속 실무 협상이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 협상을 통해서 로드맵도 만들어내고 서로 주고받을 것을 만들어 내 가는 과정에서 가능한 많은 레버리지를 좀 쥐고서 이것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재권 위원 그런 어떤 전술·전략적 차원에서 여러 검토가 있을 수도 있다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종전 선

언이 아무리 정치적 선언에 그친다고 할지라도 그 종전 선언이 갖는, 미국 내 또는 국제간의 그런 법적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미국이 갖고 있는 적성국 교역법 이게 북한 제재의 어떤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그런 법도 종전을 선언하게 되면 어떤 논리적 귀결로서 새로운 검토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야기도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모든 면들을 검토해서 종전 선언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심재권 위원 그다음에 장관께서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부분적인, 남북관계에 있어서 4·27 선언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제재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허용을 촉구했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심재권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비핵화의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군사적 위협 해소 그다음에 체제의 안전 보장입니다. 저는 그 두 가지가 이번에 4·27 정상회담 또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관계 정상화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로 귀결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로 관계 정상화 없는 비핵화는 불가능한 겁니다. 비핵화 없는 관계 정상화가 불가능한데 그러면 제재 완화 또는 제재 해제가 수반되지 않는 그런 관계 정상화도 불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 점에 있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가 그 원칙들을.....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호 그렇게 되면 원칙이 좀 무너지는 것 같은데요.

○심재권 위원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세 원칙이 함께 수행돼 가는 과정에 있어서 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의 기본 아이템으로 제재 완화·해제도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북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는 안보리 차원에서 채택된 국제사회의 제재이기 때문에 안보리 차원에서의 별도의 심의와 결정이 있어야 완화되거나 해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요청하는 것은 지금 있는 그 안보리 제재의 틀 하에서 이미 그런 허용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져 있는 제재 예외 신청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제재의 틀에 상충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보리 결의 자체도 결의의 기본 목적에 부합한다거나, 즉 북한 핵 문제에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된다거나 또 인도적 지원 문제에 있어서는 예외를 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판문점 후속 이행을 위해서 예외적인 조치를 지금 신청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정부의 제재에 대해서 기본 입장은 비핵화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안보리, 국제사회의 제재들은 유지되고 충실히 이행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
○위원장 강석호 심재권 전임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거 한 번씩 드리면 계속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그래서.....

○심재권 위원 앞으로 그냥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강석호 추가질의 때 많이 활용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 위원 장관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미국 방문해서 유엔 안보리 브리핑을 통해서 대북제재 예외조항 요구하셨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정병국 위원 거기에서 답을 들으셨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정병국 위원 동의를 받으셨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대사급 차원의 브리핑이었기 때문에, 제재위원회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실무적인 레벨의 대표들이 하는 제재위원회가, 물론 15개 회원국들이지만 별도의 제재위원회라는 것이 따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브리핑은 대사급 대표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리고 따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서도 이 문제를 협의를 하셨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정병국 위원 거기에서는 긍정적 답을 받으셨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여러 사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정병국 위원 특히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가 남북경협을 지금 여러 측면에서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정병국 위원 그런 과정에서의 불가피하게 이제재를 풀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미국은 설명을 충분히 듣고 또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래서 그 검토의 일환으로 미국 정부가 마크 램버트 미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를 한국에 파견하게 되는 거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정병국 위원 그래서 대북제재 실태 파악을 지시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지금 이분이 오셔 가지고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개성공단 기업들, 현대아산, 코레일, KT, 실질적으로 남북경협과 관련된 기업들하고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개성공단 다시 재개하려고 하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개성공단 재개 문제는 지금……

○정병국 위원 재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아닙니다.

○정병국 위원 그러면 개성공단 관련된 기업들을 만나는 이유는 뭘까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글쎄요, 그것은 미국 측에서 아마……

○정병국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장관께서는 언급한 게 없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경협에 대해서는……

○정병국 위원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셨나요, 구체적으로 경협 사업별로 말씀을 하셨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전반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정병국 위원 전반적으로 얘기하신 거고 구체적인 사업별로는 얘기를 하지 않으셨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케이스……

○정병국 위원 케이스별로 하셨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구체적인 사업이라 그럴 수는 없고요. 개성공단이 가동되었을 때 활동을 했던 우리 기업들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한 바가 없고요.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으로서는 개성공단 재개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 여건이 아니라는 것이……

○정병국 위원 이것은 아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정병국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현대아산일 경우에는 금강산 관광 사업을 재개할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한 게 있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것도 없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것도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정병국 위원 그러면 코레일 같은 경우는 남북 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됐으니까, 그 대상이니까 예를 들어서 남북경협에서 철도 연결 문제라든지 통신선 연결 문제라든지, KT가 통신선 연결과 관련되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이미 발표가 된 거고 실무적으로 남북 간에도 교류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언급이 됐었을 것 아니겠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사업별로 얘기는 안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대규모 경협은 지금 정부로서는 연구하고 현황 파악 정도의 남북대화가 가능하고 본격적인 경협을 하기 위해서는 여건이 성숙되어야 된다, 즉 제재가 많이 완화되거나 해제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입장입니다.

○정병국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할게요.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와서 면담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보면, 대상을 보면 개성공단 관련 기업들, 현대아산, 코레일, KT. 코레일이나 KT는 저희들이 이해가 가요. 그러나 현대아산이나 개성공단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부 내에서도 어떤 논의가 돼 본 적이 없는데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이해가 가지 않고, 그래서 확인을 드렸는데 장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이 없다. 맞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정병국 위원 좋습니다.

지금 장관께서는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나 여론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불안한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북대화 지속돼야 되고 그 과정에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를 도달하는 건데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경험도 해야 되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미 간에 하고 있는 훈련도 일시중지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이 먼저냐, 저것이 먼저냐에 따라서 시각 차이가 있어요,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안을 불식시키는 것도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을 경우에는 성공하기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각별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장관께서 하시는 외교 활동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공표하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 스카이 엔젤이라든지 리치 글로리호를 통해서 지금 유엔 제재사항인 북한 석탄이 환적이 되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수입이 됐다라고 해서 지적을 받았고, 정부에서도 이것을 지금 조사하고 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런데 그것이 작년 10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그 당시에는 유엔 제재 결의안 2397호가 발효되기 이전이었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발효가 됐는데 그 이후에 발효된 2397호에 의해서 봤을 때 이 대상이 되고 있는 스카이 엔젤호라든가 리치 글로리호를 우리가 역류하거나 나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런 불법 활동을 했다 하는 조사 결과가 분명하게 나온다 하면 그 뒤에 결의라고 하더라도 안보리 제재의 판단에 따라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외무부에도 자료 요청을 했고 통일부에도 자료 요청을 했고 정부 관계 부처에 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8개월째 되고 있는

데 아직까지도 수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주무부서의 장관이 보고받은 것은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조사하는 게? 조사와 수사.

○외교부장관 강경화 이 북한산 원산지 증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주, 그 배가 등록된 기국……

○정병국 위원 좋습니다. 화주는 파악이 됐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선주는 파악이 됐습니다.

○정병국 위원 아니요, 화주.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화주도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 화주는 어디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어쨌든 이 모든 사항이 지금 조사 중이기……

○정병국 위원 아니, 화주가 누구냐고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조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

○정병국 위원 아니, 화주를 왜 못 밝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정병국 위원 선주가 다 나왔는데 화주를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저희가 조사가 종결이 되면 다 밝혀집니다.

○정병국 위원 조사하는데 화주가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화주에 의해서 결과가 바뀌지는 않지 않습니까? 화주를 왜 못 밝혀요? 아니, 일반적으로 수사를 하는데 피의자를 밝히지 못하는 수사가 있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조사 중에 그런 공개를 할 경우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병국 위원 어떤 영향을 받아요? 문제점이 뭐냐고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이것은 외국의 기업도……

○정병국 위원 외국 기업이든 자국 기업이든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데 차이가 있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 조사 과정에 있어서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어디까지 공개……

○정병국 위원 뭐가 민감하나 이거예요. 뭐 때문에……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사 당국한테 물어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 주무부처 아닙니까? 왜 이렇게 책임 회피를 하세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외교부는 안보리하고의 협의, 안보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조사 당국은 달리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 장관님, 조사 당국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부처이기 때문에 묻는 것이고요.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필요할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외를 두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외가 계속되면 곧 파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제 통일부장관을 상대로도 얘기를 했지만 지켜지지 않는, 5·24 조치와 같이 실효성이 이미 없는 제재들은 빨리 정부가 결단을 내려서 풀 것은 풀고 그리고 원칙이 있는 제재는 원칙대로 강하게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따라서 5·24 조치와 같이 현재의 남북 교류 사업에서 낡은 울타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걷어 내시고 제재가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레버리지로서 작동하려고 하면 원칙이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원칙이 있는 제재라고 하는 것은 국제 공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고, 지금 말씀드린 스카이 엔젤호라든지 리치 글로리호와 같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조차도 화주가 누구인지도 밝히지 못하는 정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뭔가 꼼수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못 밝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수사 당국으로서는 그 부분도 다……

○**정병국 위원** 밝히지 말라고 하던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공개를 못 하는 부분입니다. 정 필요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혜영 위원** 오늘 회의가 20대 국회 하반기 외교통일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고 외교부로부터

처음 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원칙적인 문제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와 관련해서 좀 개선이 필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장관님 취임한 뒤에도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된 거니까 비근하게 제가 예를 드는데 꼭 그것이 거기에 아주 맞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사례로 드는 데, 이를테면 이 보고의 현장성·구체성·시의성이 너무 없습니다. 한 달 전에 만들었거나 일주일 후에 만들었거나 전혀 판별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생명력이 없는 보고서를 어떻게 만들까를 열심히 연구한 것의 총 집적이 이런 게 아닌가. 제가 장관 취임하시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라오스에서 어떻든 우리의 해외 지원 사업과 관련된 대규모 참사가 났다 그러면 그게 여기 담기거나 아니면 별지로라도 한 장 써서 내면 우리 위원들도 ‘아, 외교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긴급하면 긴급한 대로 국민에게 알리고 국회와 공유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이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보고자료가 갖는 생명력·숫자·시기·목표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아주 죽은 보고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도 이 보고서를 보고 그것을 근거로 뭘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의견을 낼 생각은 아무도 안 해요. 이것은 다 그냥 장관이 읽으시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아요.

나는 모르기는 몰라도 국회 출입하는 기자들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외교부의 업무 보고 자료 보면서 혹시 쓸 만한 기사가 있을까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질의응답만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낭비입니까.

그런 점에서 전에도 이 보고자료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때 하는 시기와 그것을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의 고위 간부들이 공유하는, 공동으로 접검하는 절차가 있느냐를 내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별로 안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그래서 살아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게 흔히 말하는 국회 경시가 아니라 또 국회는 국회로서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보고, 가장 공식적인 보고의 기회니까 좀 살아 있는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좀

전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방금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 석탄 싣고 온 배나 선주 같은 것도 좀 치밀하게 따져서 보고는 적극적으로 국회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런 것까지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경계선을 잘 따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무조건 보고 안 한다. 특히 자료로 만들면 귀찮아진다 이런 식의…… 내 추측인데 크게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지금 외교부 전체에 지배적인 분위기가 아닌가.

그래서 좀 긴장된 보고, ‘야, 이것은 좀 보고를 하되 어느 선까지 해야, 무슨 문제가 없을까? 그렇지만 국민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에 최대한 생생하게 또 현장감 있게 시의성 있게 하자’ 이런 고민이 녹아난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전에 한 것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외교부가 정부 부처 중에서 다면평가제도를 꾸준하게 지속시켜 오고 살려온 부처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 대한 점검과 좀 더 발전 심화시킬 계획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을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이 비핵화 진전과 맞추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국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 이런 게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난 4·27 남북 정상이 함께 발표한 판문점 선언에서는 ‘올해 종전 선언을 하고 종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남북이 합의했다. 그리고 이러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삼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장관님 보시기에 어느 게 더 구체적인 목표와 이런 걸 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건 분명하시지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원혜영 위원 남북 정상의 합의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계획을 포함해서 보고에 들어가야 되는데 훨씬 추상화시켜서 한 게 외교부의 보고이고, 남북 정상이 발표한 그 내용조차도 다 뭐가 뭔지 모르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좀 진짜 근본적으로 살아 있는 보고, 국민에 대한 보고라는 관점에서 다시 근본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월에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이 있는데 여기서 남북 외교장관 간 회담 또는 남·북·미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우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보고서 문제에 대해서, 아픈 지적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런 보고서를 만들 때마다 늘 시간에 쫓기고 또 저로서는 각급에서 검토를 하고 결국 저한테 온 것은 어떻게 보면 짜깁기 식의 그런 보고서가 되겠는데, 하여튼 지적하신 점을 충분히 감안하고 고려해서 다음번에는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생명력 있고 시의성이 있는 보고서가 되도록 우리 간부들 모두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ARF 관련해서는, 다음 주말에 열리게 되겠는데요. 남북정상회담으로 조성된 남북의 대화 모멘텀이 각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이 물론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지만 지금으로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남북, 미·북 또 가능하다면 남·북·미 이렇게 3자 외교장관이 만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원혜영 위원 9월에 유엔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불참할 것이라는 예측 보도도 있던데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마찬가지 연장선상에서, 또 정상들의 움직임은 아무래도 좀 더 훨씬 더 많은 준비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는 할 수 없겠지만 이 역시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원혜영 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의 지적을 하신 내용인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북제재의 예외 인정과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아주 쉽고 납득하기 좋게 잘 정리해서 대외적으로도 또 대내적, 그러니까 국민에게도 잘 좀 설득하고 전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창올림픽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주목하는 평화올림픽이 되는데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장벽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잘, 예외가 왜 필요한지

를 설득하고 해서 유엔 안보리의 동의 속에서 성공적으로 치렀거든요. 앞으로도 남북 간에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위해서 대북제재 예외 인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서 안보리 이사국에게 이러한 부분을 강조한 것도 아주 성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잘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여튼 이 부분을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국민들에게 대북제재 완화와 예외 인정의 차이점이 뭔가를 쉽고 간결하게 또 다양하게 소개해서 혼동해서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다가 우리만 완화하는 거냐’ 그런 게 없도록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원유철 위원님 차례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휴식 시간을 갖고 또 재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유철 위원 이제 내일모레가 되면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꼭 65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금년 내에 종전 선언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장관님, 현재까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목적은 뚜렷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유철 위원 당초에는 남·북·미에서 이제 중국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마치 3차방정식이 4차 방정식으로 복잡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중국도 협정 당사자니까 참여해야 되겠지요.

북한의 요청에 의한 겁니까,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

○외교부장관 강경화 중국도 저희가 처음부터 계속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도 3자 또는 4자 이렇게 융통성을 두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 논의의 협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미 판문점 선언

에서 어느 정도 예견을 했던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이것이 북한의 요청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원유철 위원 중국이 참여하는 것이 4자 종전 선언에 더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단계에서?

○외교부장관 강경화 효과 면에서는 중국도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또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같이 협력을 이끌어 나가야 될 중요한 상대국이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계기에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 또 적극적인 참여로 같이 가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합의의 그런 어떤 무게라든가 이런 것을 더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말씀드렸듯이 또 이것은 계속 협의하고 협상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원유철 위원 장관님, 다음 달 초에 싱가포르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에 참가하시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원유철 위원 어떤 의제를 가지고 참가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ARF는 지역 안보 이슈를 다루는 포럼입니다. 물론 한반도 문제를 아주 상세적인 의제로 매년 다뤄 왔습니다.

○원유철 위원 이 자리에서 종전 선언에 대한 4개국 간의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양자 또는 3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된 바 없습니다.

○원유철 위원 목표는 아무튼 이 ARF 회의를 통해서 종전 선언에 대한 좀 더 실무 차원에서의 협상, 또 외교장관 간의 협의 이런 것이 진행되지 않겠어요? 그 의제를 안 다룬다면 좀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다루겠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적정한 계기에 협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유철 위원 지금 미국과 중국의 종전 선언에 대한 현재까지의 입장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이 사안과 관련된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제가 여기서 밝혀 드리는 것은 좀 적당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 미국도, 중국도, 우리가 계속 논의를 해 나가고 있다 이

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유철 위원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종전 선언과 관련돼서 ‘선 종전 선언, 후 비핵화’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선 비핵화, 후 종전 선언’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봐도 됩니까, 큰 틀에서 보면?

○외교부장관 강경화 북한의 입장은 매체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어쨌든 북한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 또 우리의 필요한 부분은 중국의 그런 어떤 건설적인 역할 이런 것을 다 담아서 결과를 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원유철 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중요한데, 비핵화랑 맞물려 있으니까요. 그렇지요, 장관님?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원유철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입장은 ‘선 종전 선언, 후 비핵화’, 미국의 입장은 ‘선 비핵화, 후 종전 선언’ 이런 입장을 가지고 지금 이 4자 종전 선언에 임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동의하시는지 묻는 겁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북한과 미국의 입장에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인 협의로서 합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과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원유철 위원 그렇다면 외교장관님께서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이 종전 선언과 관련돼서 어떠한 로드맵을 가지고 풀어가고 있는지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정부로서는 이 종전 선언은 하나의 신뢰 구축 조치로서 비핵화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강화시켜 나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조치로 생각을 해서, 이로 인해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 낸다 하는 차원에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형식에 있어서나 또 내용, 시기에 있어서 우리 정부는 융통성을 가지고 협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원유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이제 종전 선언을 하면 걱정하는 분들은 유엔사 또 주한미군 문제 이런 것들이 후속 조치로 논의가 되고 이러한 문제들이 대두될 텐데 어떻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종전 선언을 한다고 하는

게 정전체제를 바로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정전협정으로 65년간 지속되어 온 정전체제는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서 정전협정을 대체하기 전까지는 지금의 정전체제가 지속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유엔사의 역할이라든가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역할이라든가 정전협정에 담긴 그런 모든 것이 평화협정 체결 때까지는 그렇게 계속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 선언이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정전체제를 대체한다거나 정전체제의 그런 어떠한 변화를 갖고 온다는 생각은 저희 정부로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한미동맹 차원의 문제로서 북한과의 협상테이블에 놓을 이슈는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미가 같은 생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원유철 위원 종전 선언이 잘 추진이 돼서, 실무적으로 추진돼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9월 유엔총회에서 할 가능성성이 높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총회가 아무래도 여러 정상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반드시 이때다 하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말씀드렸듯이 유엔 총회를 계기로 정상들이 만나는 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원유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정회를 했다가 15분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석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현 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이석현 위원입니다.

외교장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북한하고 미국 간의 실무 협상이 좀 지지부진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왜 뭐가, 구체적으로

뭐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실무 그룹에서 후속 협상을 해 나가자 하는 그런 합의는 있지만 날짜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안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어쨌든 조속히 후속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측에 많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미국이 11월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지금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열성을 그동안 내 왔는데 중간선거 끝나고 나면 미국 입장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또 알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항상 보면 두 가지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대해서 공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평화적으로 매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항상 그래요.

심지어 옛날에, 2005년에 북경에서 9·19 선언 있을 때 북한 핵 폐기하고 경협 문제 다 이렇게 합의를 했었는데 하루 지나서 그 이튿날 BDA의 북한 계좌를 동결시켜 가지고 일이 다 깨져 버렸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물어봤어요, 크리스토퍼 힐한테. ‘왜 미국이 그때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미국에는 두 개의 정부가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는 정부가 첫날 9·19 선언을 한 것이고 또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부가 그다음 날 깐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감명 깊게 저도 들었어요. 이와 같이 미국에는 항상 그런 두 개의 흐름이 있어요. 지금도 반대 얘기들이 상당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기하지 말고 지금 이때, 쇠뿔이 뜨거워졌을 때, 달구어졌을 때 쇠뿔을 뽑으라는 말처럼 지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하루하루가 안타까워요, 이렇게 시간을 소비해도 되겠는가.

종전 선언이라는 것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종전 선언은 말씀드렸듯이 판문점 선언에 저희가 명시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후속……

○**이석현 위원** 지금 그러니까 북·미 간 실무 협상에서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실무 협상은 아직 시작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북·미 사이에서도 이것이 분명히 의제가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합니

다.

○**이석현 위원** 혹시 종전 협상은 여기에 대해서 거창한 의미를 부여해서 큰 부담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실은 이게 정치적인 그런 어휘일 뿐입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참여정부 때 조성렬 교수—그 당시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었던가요—가 종전 선언이라는 개념을 만든 겁니다. 원래 평화협정 까지 가는 데 시간이 너무 걸리고 먼 길이니까 중간에 하나 좀 단계를 설정해 놓은 게 종전 선언이라는 것이거든요.

종전 선언은 아시다시피 국제법상의 무슨 의무나 그런 부담을 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이석현 위원** 다만 정치적 선언일 뿐이에요,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래서 북한 핵을 폐기한 뒤에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북한 핵 폐기를 촉진하기 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요? 맞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우리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종전 선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연말 안에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말해 온 것이고.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이석현 위원** 그런데 지금 되어 가는 것 보면 너무 답답하고 느려서 이게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 정부가 종전 선언에 대해서 미국을 좀 설득해서 시원시원하게 좀 진행이 되면 좋겠어요. 또 그럴 계기가 되는 게 과거, 전에 핵실험장 폐기한 데 있어서 엊그저께는 미사일 엔진 실험하는 그것을 또 지금 폐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나름대로 정상화담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보이니까 미국도 그것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좀 하시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도 북측하고의 어떤 다양한 계기로 이견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좁힐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계기마다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해요.

작년 10월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군사옵션 얘기가 서너 번 나올 정도로 위급했어요, 위중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지금 여기까지 평화 분위기를 만들어 왔는데 이것을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가시적인 어떤 결과를 못 내놓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그동안도 노력했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참 얼른 이해 안 가는 게 장관님 한 분은 바쁘게 활동을 하세요, 화면에 봐도. 그런데 공공외교를 별로 힘쓰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워싱턴 갔을 때 존스홉킨스대학 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일본이 우리나라가 쓰는 공공외교 예산의 60배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장관이나 대사들만이 외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미국의 국회의원들도 한국에 많이 초청해서 자꾸 사정을 알리고 또 각종 연구 기관, 연구단체 이런 데에도 접촉을 가지고 이것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않는다는 것이, 작년에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하고 테드 요호 동아태소위원장이 한국에 다녀간 것 그것은 참으로 바람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별스럽게 초청하는 것 같지도 않고, 특히 아까 얘기한 공화당 그분들만이 아니라 민주당 사람들을 많이 초청해야 됩니다.

민주당이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한반도 평화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류 언론(mainstream media)들이 전부 트럼프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것 잘 아시잖아요. 그런 언론들도 초청을 해서, 계기를 만들어서 설득을 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하는 일은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트럼프가 만일에 ‘지금 북한하고 싸워야 된다. 지난번에 정상회담 한 것 없는 것으로 돌리자’ 하면 왜 그러느냐고 달려들 사람들이 바로 또 미국 언론이에요. 또 미국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미운털 박힌 것 때문에 우리가 피해 보면 안 되거든요. 그 노력을 해야 돼요.

얼마 전에 멕시코 국경 넘어온 불법 이민자들, 부모하고 애들을 갈라놓아서 애들이 운다고 인도주의 면에서 여론이 들끓으니까 그것 수정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어떠냐 하면 수십 년간 부모 형제를 갈라놨어요. 미국이 책임이 있어요. 또 거

기애 대해서. 1945년에 민주당 루즈벨트 대통령이 얄타회담에서 갈라놓은 겁니다, 한반도를. 그 뒤로 지금 수십 년간을 우리는 부모를 못 만나요, 형제를 못 만나요. 인도적인 면에서 우리가 미국에 호소해야 될 벌미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다양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국회의원들도, 장관님만 다니지 말고 국회의원들 좀 업고 다니고 또 각종 단체 그리고 미국에 있는 분들 초청하고 그런 데 예산을 많이 신청을 해서 우리가 광범위한 전방위적인 외교를 펼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지금. 그런데 일본이 쓰는 공공외교 예산의 60분의 1 쓴다는 말을 듣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공공외교를 재외공관 또 본부 간부들 방미를 통해서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에 있어서나 인적인 역량에 있어서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 공공외교, 특히 대미 공공외교 역량을 늘릴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마는 있는 예산, 있는 자산 한도 내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래서 방향을 가지고, 공공외교를 늘려 나간다는 방향을 가지고 앞으로 예산 신청도 하시고 이렇게……

○외교부장관 강경화 알겠습니다.

○이석현 위원 또 일본을 활용해야 됩니다. 일본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일본이 우리 하는 일에 대해서 훼방 놓는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일본과, 김정은·아베가 정상회담 가지면 이 상황을 풀어나가는 데 도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납치자 문제를 구실로 해서라도 좌우간 이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접촉이 이루어져서 아베가 외교적으로 좀 한쪽에 몰려 있는데 아베가 활개를 치게 해 주는 것이 남북 평화 문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하나를 더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다 되어 버렸는데, 북한 석탄 환적 문제, 그게 우리나라에서 환적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환적해서 인천항으로 갖고 온 것이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이석현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가짜 뉴스가 횡행해서 달리 알려지기도 하고, 또

알고도 우리가 아무런 조치 안 한 것처럼 막 보도되기도 하고 그래요.

선박 억류 왜 안 했나 이 문제가, 선박을 억류하도록 한 유엔 결의안 2397호가 2017년 12월에 통과된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런데 10월 달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잖아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이석현 위원 실은 그때까지는 이게 억류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적으로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런 것을 많이 홍보를 좀 해야 되겠어요.

다만 의심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의 석탄을 거래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사를 진행했던 것이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이석현 위원 1분 더 해도 괜찮나요?

○위원장 강석호 예, 하십시오.

○이석현 위원 그리고 또 그런 문제가 일어난 뒤로는 우리가 선박들을 억류를 하고 있지요, 지금도? 선박이 세 가지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억류된 선박 3건에 대해서는 조사가 되어서 그 결과를 다 공개한 상황이고요. 지금 조사 중인, 요새 기사화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말씀 못 드린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석현 위원 그래서 미국 국무성은 우리 한국의 대북제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는다, 신뢰한다고까지 막 말씀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자꾸 가짜 뉴스가 횡행해서 좀 적극적으로 기자회견도 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해명 보도자료가 7월 20일에 한 차례 나오고 말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미국 국무성이 우리를 확실하게 믿는다. ‘우리 안 그랬다, 왜 한국 신문들이 그러냐?’ 이렇게 국무성이 얘기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돌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저는 사실 처음 와 가지고 업무 파악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무엇을 질문을 해야 될지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그동안의 느낌 같은 것도 말씀을 드리면서 또 여쭤볼 것 좀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남북문제를 어디다가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워낙 많이 크게 진전되고 또 서로 복합적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역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외교부장관님께 여쭤봐야 될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

(강석호 위원장, 정양석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몇 가지 이렇게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전에는 남북관계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꼭 어느 한쪽이라기보다는 이유에 의해서 경색이 많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실 경험하지 못한 것을 최근에 작년 말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참 우리 국민들이 미처 체험하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남북 간에 대화 분위기가 이렇게 계속 심화되고 또 좋은 대화들이 많이 오가고 또 교류·접촉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안심되고 바람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국민들이 정보를 덜 이렇게 접촉을 하다가 보니까, 또 그 문제가 국민들한테다 브리핑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방도 그렇고 특히 외교 더 그럴 것이고 통일도 마찬가지로 그냥 일반 사항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국민들한테 있는 대로 다 알릴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지금 이석현 위원님께서도 홍보를 많이 강조를 하셨지만 제대로 못 알린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실제로?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해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뉴스는 나오고 국민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좋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전에 북한이 굉장히 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과의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정상회담, 정말 구경하지도 못했었던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상회담에 북한이 나오게 된 가장 큰 동의는 뭐였다고 보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북한의 그런 행동 뒤에 담긴 북한의 셈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과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북한으로서도 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도 얘기를 했지만 하여튼 북한의 어떤……

○**이정현 위원** 장관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저는 잘 모르니까 신문에 난 것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북한이 북·미 회담을 하고, 또 트럼프가 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굉장히 다급하게 애절하고 간절하게 하기를 원했었고, 북한이 뭔가가 쫓긴 게 있었었고 간절히 대화를 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표현이 아니고 언론 표현에 의하면 어쨌든 북한의 핵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 말하자면 군사적인 그러한 타격을 가하겠다고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계속 얘기를 해 왔었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아홉 차례의 대북제재 중에서도 중국이 적극 참여를 안 했다가 중국을 참여하게 해 가지고, 그 두 가지가 굉장히 북한한테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북한은 그것을 어떻게 해소를 하기 위해서 북·미 회담을 굉장히 간절하게 원했고 실제로 나왔다.

언론 보도 잘못된 겁니까, 보는 시각이? 간단하게만 그냥……

○**외교부장관 강경화** 싱가포르 합의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합의에 북한은 비핵화를 약속했고 또 미국은 체제 안전 보장을 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회담, 이렇게 어렵게 정말 세기적으로 이루어진 이 회담의 가장 큰 이유와 목표와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였었고 북한은 또 그것으로 인해서 대북제재를 일단 해제해 주고, 체제 보장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나는 미국만 북한의 체제 보장을 하는 대상인지 중국도 북한 내부 체제 보장의 그러한 대상이 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렇지만 어쨌든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그 어떤 것도 그 두 가지를 넘어서는 그런 주제와 의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있을 수는 있는 것이지만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우리로서는 북·미 사이에 그런 대화가 비핵화는 물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견인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방금 말씀하신 비핵화 그게 최종 목표고 가장 큰 주제고 그것을 해 가는 과정에 이런저런 얘기들이 종전선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 부차적인 것이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북한의 비핵화가 모든 지금 북·미 간, 남북 간에 또 한반도에 관련된 가장 큰 의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비핵화에, 아까 여러 가지 ‘견인, 견인, 견인’을 말씀하시지만 거꾸로 비핵화가 됐을 때 나머지를 한꺼번에 다 견인해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작은 것으로 큰 것을 견인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비핵화가 어떤 비핵화냐 그러면 완전하고도 그다음에 검증 가능하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비핵화여야 되고 거기서는 한 치도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되는 문제고 그렇게 해결되면 나머지도 다, 종전협정, 평화협정부터 포함해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돋는 그밖의 많은 지원부터 시작해서, 대북제재 해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는 다 견인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북·미 회담을 하고 나와서는 그 뒤에 거기서 여유를 찾고 중국하고 세 차례 정상회담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북한이 갑자기 그다급해졌었던, 북·미 회담 할 때의 그런 다급한 모습은 다 사라져 버리고 여유만만하고 느긋하고 굉장히 그런 것이 보이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금년만 들어서 북한하고 두 군데서 뛰웠던 비행기를 다섯 군데서 취항을 하게 되고 또 관광객들도 거의 10배가 더 늘고 이런 식으로 많은, 북한이 말하자면 아까처럼 경제 제재로 인한 다급한 상황, 그렇게 해서 나왔었던, 비

핵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했었던 북한이 현재 상황이 달라져 버린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런 어떤 후속 협상이 기대만큼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느낌들이 있으신 것은 언론에 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비핵화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외교부로서는 그것은 정말 긴 호흡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잠깐만요, 장관님. 긴 호흡으로 간다는 것에 진적으로 동감이고요.

그래서 정말로 소프트랜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남측이 할 수 있는 것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북한하고 함께 그런 호흡을 맞춰서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설득을 해야 되고, 전적으로 공감하고, 어쨌든 지금 같은 그런 접촉과 대화와 교류의 여러 가지 형태를 더 많이 늘려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비핵화를 사실은 국민과 언론은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 쪽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별로 덜 하는 대신 종전 선언을 계속 말씀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다른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종전 선언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화협정 전문 안에 종전협정을 넣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비핵화가 아주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간다든지 아니면 거의 접근해 갔을 때 이렇게 간다든지 순서상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다른 것을 다 제치고 종전 선언부터 먼저 한다고 하는데, 그냥 단순한 선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국민들 앞에서 할 소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종전 선언이 그냥 단순한 선언입니까?

선언 이후에 제기될 수 있는 너무도 많은 한반도의 실질적인 운명과도 관련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뒤따른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단순한 선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단순한 선언 때문에 그 중요한 북한의 비핵화라든가 또 대북제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린다든지 약화시킨다든지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남북 문제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정권의 문제도, 어느 한 정치인의 문제도, 한 대통령

의 문제도 아니고 민족 전체의 문제고 이 정권 끝나고, 끝나고,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될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모두가 공감하고 그 다음에 모두가 공유하고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해 가지고 나갈 문제지 이렇게 종전 선언을 갑자기 딱 들고 나와 가지고 이 종전 선언으로 다른 이슈를 덮으려고 한 것 같은 오해를 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더구나 종전 선언의 의미를 그렇게 낫게 봐 가지고 ‘그냥 단순한 선언이다’, 국민 앞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말하자면 최근 들어서 남북 간에 정말 경험하지 못한 그런 많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북·미 간 대화는 정말 못 봤던 것을 봤고 비핵화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북한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나선다는 것도 처음 봤지만……

저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양석 예, 1분 추가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사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정상회담도 그전에, 김영삼 대통령도 정상회담이 다 합의가 된 적이 있었고, 72년도에도 고위급 회담이 있었고, 그다음에 노태우 정권 같은 때는 지금도 금과옥조로 삼고 있는 남북기본합의서를 포함한, 그때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포함한 그다음에 지금 같이 ‘통일, 통일’ 해 갖고 북한을 위협적으로 흡수통일에 대한 겁을 주는 게 아니라 한민족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까지 만들어 내서 정말 굉장히 바람직하게 했고, 또 이산가족 상봉도 수도 없이 그전에도 이루어졌었고, 철도부터 시작해서 남북 간의 교류도 그전에 수도 없이 많이, 새로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체육 교류 같은 것 다 됩니다.

진전, 진전, 진전이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비핵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집중을 해야지 이것을 정부가 먼저 나서서 분산을 시키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중의 여론도 있으니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양석 장관님, 간단하게 답변하시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우리 정부가 종전 선언을 추진한다고 해서 비핵화에 대한 포커스를 흐리기 위한 의도는 분명히 아니고요. 또 흐려진다고 몇 언론에서는 그렇게 풀이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정부의 의도는 아니고 또 오히려 종전 선언을 통해서 비핵화 대화를 더욱더 추동시켜 나간다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비핵화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국제 사회 공동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제재도 비핵화를 견인해 나가기 위해서 꾸준히 그리고 충실히 이행이 돼야 된다 하는 기본 입장은 정부가 누누이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의 틀이 완화된다거나 비핵화에 대한 그런 포커스가 흐려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도가 전혀 아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정양석**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미애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 장관님, 대북제재는 주로 경제 제재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것은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이런 것으로 인한 것이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추미애 위원** 북한 고립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런데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고 또 남북대화를 이어가고 남북 간의 협력을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 유엔 결의를 너무 형식적으로 적용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요.

예를 들면 판문점 선언 이행하려면 문화·체육 분야의 교류도 필요하고, 또 최근에 산림 조림 사업을 위한 병해 방재를 위한 방충 이렇게 하려면 살충제가 다 화학약품 성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재에 해당이 되는 품목이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적용하니까 실제 할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 개성공단에 남북공동사무소를 설치하려고 해도 남북 간의 인적 왕래를 위해서는 각종 편의시설 또 회의 공간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마련하려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다 제재 위반이냐 아

니냐를 품목별 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런 건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기본적으로 제재의 틀이 굉장히 그야말로 전방위 제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화학약품이라든가 이중 용도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특히 안보리 제재 대상이 다 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북한 고립 자체에 제재의 목적을 둔 것이 아니고 북한은 최근에 오늘도 38노스의 관측에 의하면 서해 위성 발사장의 해체를 시작했다는 보도가 있는 것이고요. 또 곧 이어서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쇄할 것이라고 북한이 밝힌 것거든요. 이런 걸 보면 북·미 회담 이후에 북한은 일단 행동으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대북제재라는 것이 미사일 도발과 또 핵실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또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 달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제재에 대해서는 좀 예외, 현행의 제재 틀 안에서도 불가피한 예외를 우리가 노력해서 그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남북 교류·접촉 자체가 그냥 구호에만 그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려가 되고요.

거기에 대한 외교부의 대책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남북 여러 가지 협력 또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제재,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고 제재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예외로 인정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계속 안보리 제재위원회 또 제재위원회의 핵심적인 회원국인 미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외를 받는 데 있어서는 안보리 결의에도 명시가 돼 있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제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뭘 받는다 하는 것은 제재의 차원에서 좀, 제재위가 그렇게 결정을 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어쨌든 저희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그리고 문제의 당사국으로서 그 제재를 충실히 이해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예외를 지금 신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미애 위원** 저는 외교부가 안보리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다 하더라도 그 케이스라는 것을, 어떤 케이스냐 하면 남북공동사무소 설치

에 또는 그 가동에, 운영에 필요한 케이스, 케이스의 폭을 좀 넓게 잡는 주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케이스라는 것이 무슨 건건이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 사업 목적을 설명하면서 그 사업 목적의 일정한 반경 내의 반출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감시하겠다든지 해서 그 케이스의 해석을 좀 더 넓혀 주시고요.

또 산림 방재나 이런 것들도 빤히 거기에 들어가는 방재 약품이나 이런 것들은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업 목적을 설명하면서 교류 사업에 필요한 것 이면 그것이 사업 목적을 일탈하지 않도록 감시하면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좀 더 남북 교류에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로 해서 이것이 마찰이 안 되면서 제재의 원칙을 준수하는 그런 논리 개발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도 일리가 있지요. 이른바 일각에서 지금 방금도 이정현 위원님 질문이 있었지만 비핵화의 종착역이 돼야, 뭐가 보여야지 종전 선언도 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 때문에 그런 말씀도 하시는 거지만 사실은 CVID에서 명확히 할 것은 완전한 핵 폐기거든요. 그 완전한 핵 폐기는, 거기에 항구적인 핵 폐기, P로 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역시 그것은 완전한 핵 폐기라는 것에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 국제사회가 또는 미국이 또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특히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그것은 목적이고요. 그것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검증 가능하고 또는 불가역적, 예를 들면 지금 미사일 시험장을 폐기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불가역적으로 만드는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절차적인 방법론상의 문제거든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추미애 위원 목표는 C·D이고 V·I라는 것은 나머지 다 방법인데 그 방법은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문제고 좀 더 유연해질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제재, 그 수단으로서 경제 제재도 하는 것이니까, 그러

면 그 제재도 사실은 그 수준을 북한의 실천 의지와 행동을 봐 가면서 제재의 강도를 다시 심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머지들은 C·D라는 목표를,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또는 누가 검증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불가역적으로 됐느냐 이런 것들이 다 절차와 방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북한의 의지가 보인다면 그 안에는 사실은 개런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북한이 체제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런 핵에 대한 의지도 강하다 또 북한의 대중의 어떤 불안감도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종전 선언에 대해서도 좀 더 자신감 있게, 종전 선언이 비핵화의 포커스를 흐린다,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종전 선언을 해 줌으로써, 정치적으로 주요 관련국들이 그렇게 종전 선언을 해 줌으로써 비핵화의 속도가 빨라진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여태까지는 통미봉남 아니면 통미통남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운전대를 잡았기 때문에 또 증명도 됐기 때문에 통남통세, 우리 남쪽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가라, 그래서 그게 경제 제재도 풀어지고 또 안전 보장도 가능하고 또 그러한 종전 선언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 내겠다, 이렇게 해서 북한이 한층 더 강한 의지와 실천에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도 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비핵화 관련해서는 말씀드렸듯이 긴 호흡으로 가야 할 복잡한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지만 북한의 체제 안전에 대한 보장 부분에 있어서나 또 경제 개발에 있어서도 비핵화가 빨리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그 부분도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핵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반도 또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정 그리고 북한의 경제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가기 때문에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모든 나라의 이익에 합치된다 생각을 해서 그 의지, 정상들 간의 의지를 기본으로 비핵화 실천도 속도감 있게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종전 선언은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비핵화 과정을 더욱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하자 하는 그런 취지의 조치이고, 운전대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대화의 모멘텀을 여기까지 끌고 오는 데 있어서 대통령께서 우선 주도적으로 나서셔서 만들어 오신 부분 또 외교부, 안보 부처들이 다 합심을 해서 여기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도 많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모멘텀을 더욱더 견고히 하면서 비핵화 대화 또 남북의 그런 여러 가지 협력과 대화가 선순환을 이루면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노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정양석 추미애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준 위원 유기준 위원입니다.

아까 장관님 업무보고 할 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유기준 위원 그런데 그 말은 아직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확실한 의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북제재를 국제사회와 함께 실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의지는 분명히 밝혔지만 그 구체적인 행동에 있어서는 아직 우리가 확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기준 위원 그래서 국제사회가 결의한 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안보리 결의안 2371호와 2397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유기준 위원 71호는 북한산 석탄 등 광물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고,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97호의 경우에는 그러한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들에 대해서 입항하는 경우에는 나포를 하고 압류를 하고 또 영해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검색, 나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제된 북한산 석탄이 우리나라 포항하고 인천에 반입이 된 것으로, 거의 확실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경로를 한번 이렇게

파 봤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북한에서 청진하고 원산에 석탄을 가져옵니다. 청진이 북한산 석탄이 많이 집하되는 곳인데 이것을 먼저 사흘린의 홀름스크항으로 운송을 해서 여기서 제삼국 선적에 의해서 환적을 해서 포항이라든지 인천으로 가져오는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런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유기준 위원 그래서 이게 작년 10월에 있었던 일들인데 운송한 선박이 하나는 스카이 엔젤이고 또 하나는 리치 글로리호인데 최근에 청와대 대변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작년 10월에 반입될 때부터 이 내용을 알고 정보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조사를 하고 있고 관세청이 중심이 돼서 지금 현재 조사 중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대로라면 우리가 9개월 동안 조사를 한다는 뜻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 여러 가지 적폐 청산 수사는 아주 해가 뜨기도 전에 벌써 모든 게 다 끝나는 그런, 아주 속전속결로 하는데 이 조사에는 왜 이렇게 9개월씩이나 걸리고, 아직도 진행 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늦게 진행이 되는 거지요? 수사할 의지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관세청에서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사건의 여러 가지 구체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밝혀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아주 확정적인 증거는……

○유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확정적인 증거를 제가 제시를 할게요.

먼저 북한에서 러시아로 싣고 오는 데 사용된 선박들이, 북한 선적의 선박 3척이 있습니다. 현재 이름은 은봉 2호, 통산 2호, 을지봉 6호인데 이 선박들이 이전에는 한국 국적의 선박이었습니다.

이전의 선명은 은봉 2호는 천광호이고 통산 2호는 제네시스 웨이브 그다음 을지봉 6호 이게 석탄을 운반한 선박인데 판 호프호라고 이렇게 한국 선적을 갖고 있다가 중간에 다른 나라의 선적을 취득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해서 편의치적이라고 그러는데, 플래그 오브 컨비니언스(flag of convenience) 해서 통산 2호는 파나마 선적을 잠시 취득하고 을지봉 6호는 파

마, 자메이카를 취득하고 이 이후에 북한 선적으로 바뀝니다. 이것 소유주가 바뀐 것인지 아니면 소유주는 그대로 있고 선적만 바꾼 건지 그것은 내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선박이었다가 선적국을 바꿔 가지고 북한으로 가서 북한 플래그(flag)를 달고 러시아의 석탄을 운송했습니다, 이 배들이.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에 올 때는 어떻게 왔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카이 엔젤호와 리치 글로리호 두 가지인데 한 배는 인천, 하나는 포항에 작년 10월, 작년 10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5000t, 4000t 해서 이렇게 들여왔는데 이것을 보면 뭔가 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한국 국적의 선박이 북한 선적으로 바뀌어 가지고 북한에서 사할린 홀름스크항까지 운송을 하고 그 이후에 거기서 환적을 해 가지고 그 화물을 다시 제삼국 선적에 의해서 포항, 인천으로 가져온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리 처음부터 잘 꿰매진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운항되지 않고서야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그 이후의 조사 과정에서 다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유기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조사하면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우리가 화물을 수입하고 그럴 때 선하증권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요즘은 은행을 통한 거래를 하니까 신용장 거래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송하인이 있고 수하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송하인의 경우에 조사를 하면 누구인지 금방 나올 텐데, 그리고 이 물건의 원산지 이것도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 분명히 벌써 어떤 조치를 취해야 마땅한데……

또 하나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연탄, 발전을 위해서 쓰는 유연탄을 수입하는 나라가 한 3개 정도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주로 호주·인도네시아·북한인데 그것 왜 그러느냐 하면 채굴 단가가 낮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호주·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노천광산이라서 그냥 트럭으로 가서 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굴 비용이 거의 안 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중국·러시아의 경우에는 온도도 맞지 않지만 채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맞지 않아서 요즘은 석탄 수출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 금수가 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쨌든 이것 팔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단가는 제일 낮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누가 봐도 이것은 A 다음의 숫자는 B, 1 다음의 숫자는 2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9개월 동안 질질 끌면서 지금 수사를 완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 의심할 만한 여지를 넘어서 정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관세청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게 좋겠지만 말씀하셨듯이 이게 편의치적 나라……

○유기준 위원 주무부처는 관세청이기도 하지만 주무부처는 외교부입니다. 만약에 선박이 입항한 경우에 압류를 하고 또 우리나라 영해를 통과하는 경우에 검색, 나포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데는 외교부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1호, 2397호,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조사 과정에서, 말씀하셨듯이 선주 또 배를 빌린 용선주 또 화물을 실은 화주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바뀌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추적해서 원산지를 증명한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관세청의 얘기고요.

○유기준 위원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 증거를 또 제시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한 번씩 들어오는 선박 중에 카이상호가 있고 스카이 레이디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이상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울산항, 포항·인천·평택·부산항에 자주 입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박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하면 북한의 남포항에서 석탄을 한 1만t 정도를, 2만 90t이군요. 2만 90t의 석탄을싣고 베트남의 캄파항에 하역을 했습니다. 이것도 유엔 결의안 정면 위반이지요, 수출을 못하게 돼 있는데. 이게 한 차례가 아니고 두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 선박이 우리나라에도 입항을 합니다.

그러면 2397호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연루 의심 선박이 입항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을 압류하도록 돼 있습니다. 압류할 수 있다가 아니고 압류하도록 돼 있어요. 그다음에 영해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을 나포할 수 있다. 그때는 권한을 가지는 거고 앞에는 의무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가 그것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확실한 겁니다. 북한에서 석탄이 나와 가지고 베트남에 수출했습니다. 그러면 그 선박이 운항을 해 가지고 항구에 다시 왔다면 이것 압류를 해야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안 보리 결의에 따라 선박을 압류하고 있는 나라는 지금으로서는 전 세계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지금 3개의 배를 압류한 상태이고 향후 이 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재위에……

○**유기준 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 배 중 1척은 이를 전에 제주도로부터 북동쪽 3km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스카이 엔젤호로 알고 있는데, 리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글로리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정부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1분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양석** 1분 더 쓰시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분명히 우리 정부가 유엔 결의안에 따라서 그런 것을 행사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으면 해야지요. 실시해야지요. 장관께서도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유기준 위원**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양석 간사, 강석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외교부장관 강경화** 선박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제재를 상당히 착실히 이행을 하고 있다, 제재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 아니, 아니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리고 그 2개의 배에 대해서는……

○**유기준 위원** 장관님!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유기준 위원**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배들 들어왔는데 아무 조치 안 취하지 않았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지금 스카이 엔젤하고 리치 글로리호는 10월, 정보를 저희가 처음 입수하

고 조사로 들어간 이후에 10월 달에 그 석탄 운송과 관련해서 조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우리 항구에 입항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색 결과 그 이후에는 북한 석탄을 날렸다는 그러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계속 입항을 하고 또 출항을 하도록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 조속한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위원** 장관님께서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성공이다 평가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지금 이제 시작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상현 위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성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 정부도 잘한 협상이라고 얘기 않습니까, 지금까지?

○**외교부장관 강경화** 정상회담의 결과 문서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상현 위원** 성공적이라고 계속 평가하고 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윤상현 위원** 장관님께서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1년, 2년?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구체적으로 날짜, 시간…… 그렇게 구체적으로 박기는 좀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위원** 아니,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 타임테이블도 제시 못 하고 단계적·동시적 조치에 대해서 단계별 솔루션도 없는데 앞으로의 비핵화 협상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예측도 없는 비핵화 협상을 어떻게 성공으로 얘기할 수 있나, 저는 성공이라고 자평하는 정부부처 사람들한테 강한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폼페이오 장관 최근에 만나셨지요? 7월 초에 북한 갔을 때 계속 북한 핵 관련 시설과 물질에 대해 신고해라 또 검증을 받아라.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북한은?

○**외교부장관 강경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제

가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좀 어렵습니다.

○윤상현 위원 물론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장관님, 그러면 북한이 핵·농축 활동을 중지했다 또 북한이 핵 관련 시설을 폐쇄했다 이런 얘기 누구한테도 들은 적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농축 시설을 중지했다 하는 그런 정보나 내용은 없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런 건 없지요? 그러니까 핵 관련 시설이나 물질에 대해서 신고도 안 한다, 핵·농축 활동도 중단도 안 한다, 그런데 완전한 비핵화는 하겠다. 이 정도면 완전한 속임수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앞으로 이끌어 내야 될 조치들입니다.

○윤상현 위원 아니, 지금까지 보면 이것은 속임수이지요? 지금까지 얘기는 해 놓고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있으니까 속는 첫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거지요.

장관님,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언제까지 중단하십니까? 완전한 비핵화 될 때까지 중단해야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 결정은 말씀드렸듯이 대화 국면을 더욱 이끌어 내기 위해서 한 결정이고요. 그렇지만 한미 간의 연합훈련에 관련해서는 정상 기조를 유지하면서 이런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을 한다고 하는……

○윤상현 위원 아니, 완전한 비핵화 협상에 계속 이런 식으로 끌려가면 누가 연합훈련을 재개하자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1년, 2년 가다 보면 주한미군이 로테이션, 2년이면 칠팔십 %가 다 보직 이동이 됩니다. 어떻게 한미 연합전력을 지켜 나갈 수 있겠습니까. 훈련 없는 군대는 군대가 아니다. 그래서 대단히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장관님이 최근에 유엔 안보리 가서 북한 사업에 대해서 제재 면제를 요청했는데 그 근거 조항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어떤 조항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안보리 결의 자체에 그런……

○윤상현 위원 어느 결의 몇 호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2397호에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윤상현 위원 2397호 25항 그 규정을 아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윤상현 위원 어떤 규정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 결의의 목적에……

○윤상현 위원 결의의 목적에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북한에 인도주의 활동을 하는 국제기구나 NGO 활동 또 북한의 핵탄두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 두 가지, 그것도 견 바이건으로 제재 면제를 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까지 7건의 제재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남북협력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재 면제 요청을 하겠다는데 두 가지 목적·기준에 부합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제재 면제를 받겠다고 하는 건지 장관님께서는……

이 제재 면제 조치를 외교부에서 주도를 합니까? 어디서 주도를 합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제재위와의 협의는 외교부가 주도를 하고요.

○윤상현 위원 아니, 우리 내부의 정책 결정은?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것은 안보 부서가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판문점선언이행추진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윤상현 위원 판문점선언이행추진위에서 얘기하면 외교부가 그 결정을 가지고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대북제재의 면제를 계속하면 제재의 효율성 또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김정은을 보면, 김정은이 살라미 그 소시지 썰기 쇼만 보여 주지 요리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은 김정은이 굉장히 요리를 하고 있다고 과대 선전해 주고, 또 우리 청와대는 어떻습니까? 곧 요리가 나오니까 돈부터 지불하자, 빨리 가자 이런 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북제재 자꾸 면제, 유예하자 이러면 북한 비핵화 협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남는 게 뭐냐? 북한의 핵보유국 만든다, 북핵 해법이 아니다, 잘못된 길로 자꾸 가고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그 선박 두 건, 작년 10월부터 정보를 입수하고 지금까지 정부 측에서 9개월째 조사를 하고 있다. 저는 이게 조사가 아니라…… 방치예요, 방치. 방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조사 당국이 가용한 정보

를 기본으로 조사를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위원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고요, 그 두 척의 밀매하는 선박이 서른두 차례나 우리 항구와 영해에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선제 조치가 없다. 이것은 그대로 뒤 버린 거지요. 이것은 방치입니다. 정부가 잘못한 거지요.

좀 전에 유기준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같이 유엔 결의안 2371호, 2397호 그게…… 2371호가 언제 통과됐습니까? 작년 8월 달입니다, 8월 달. 8월 달 결의안이 됩니까? 북한은 철강이나 철이나 무연탄을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수출한 것 자체가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지요.

그리고 2397호 보세요. 그 선박이 있으면 나포·억류·검색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잘못한 거지요. 잘못한 것 아닙니까, 장관님?

○외교부장관 강경화 2397호에 의거해서 정부는 지금 세 척의 배를 억류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것은 다른 경우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의 김의겸 대변인이 작년 10월에 정보를 알았고 그것을 위해서 조사 중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의심 선박이라는 것을 미국 측에서 정보를 줬으면 당연히 나포하고 검색하고 억류를 해야 되는 게 유엔 회원국으로서 의무 아닙니까? 또 우리는 북핵 문제의 최대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다? 이것은 뭐냐? 정부가 잘못한 거지요. 세상에 대북제재 우리가 가장 먼저 이행을 해야 되고 다른 나라에서 이행의 완화 조짐이 있으면 그걸 우리가 막고 해야 될 나라인데 우리가 그냥 눈 뜨고 가만히 보고 있고 방치해 둔다? 결국은 됩니까? 북한 눈치 보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잘못한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9개월째 조사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것 지금 까지도 방치하고 있는……

언제 이걸 발표하실 생각이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정부는 충실히 이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윤상현 위원 장관님, 그것은 외교부의 입장이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아닙니다. 정부가 충실히

이행을 하고 있고……

○윤상현 위원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대북제재위원회에서 봤을 때, 왜 유엔에서, 미국 측의 국무부 대변인이 그런 발언을 합니까? 한국을 두고 겨냥한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지 않습니다.

○윤상현 위원 왜 정보를 줬는데 너희들은 그것도 안 하냐……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 대한 말은 그것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이 정보를 접했던 것은 10월 초였고 10월 초에는, 그 억류 의미가 있는 2397호는 12월에 채택이 됐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러면 12월 이후에……

○외교부장관 강경화 12월 이후에는 이 선박들의 검색 결과 석탄을 실었다 또는 제재 대상이 된 물건을 실었다 하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 전의 케이스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조사 중입니다.

○윤상현 위원 아니, 그 전에 예를 들어서 그런 의심 선박이었으면 그것을 했어야지요.

그리고 또 하나 장관님, 장관님께서는 ‘종전 선언이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한다’, 저는 전혀 인정을 못 합니다. 어떻게 종전 선언이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합니까? 지금 북한의 비핵화 결과물을 우리가 받은 게 있습니까?

그런데 왜 종전 선언하고 그렇게, 우리가 먼저 미국 측에다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가서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럽니까?

아니, 북한 측이 왜 그렇게 종전 선언에 집착한다고,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전 선언을 하면 북한 측에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종전 선언은 대화로써 비핵화 또 평화체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는 세 정상의 공동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윤상현 위원 장관님, 제가 보기에는 북한 측이 얻는 정치적 의미는, 북한은 한마디로 불량 국가입니다. 불량 국가가 종전 선언을 통해서 정상 국가로 공인받는 거고, 사실상 핵보유국 아닙니까? 핵보유국의 지위를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겁니다. 그게 북한의 정치적 의도입니다.

종전 선언은 어떻게 보면 비핵화 선언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허들을 자꾸 만들어 놓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조건 투쟁을……

금방 마치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런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협상 카드로 쓰으로써 미국에 대한 조건 투쟁을 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추가적인 어떤 대가를 얻기 위한 겁니다.

결국 종전 선언을 했다고 칩시다.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철수해라’…… 지금도 주한미군 철수, 존재의 가치나 명분을 찾기 어렵다고 문정인 대통령특보가 얘기하는데 종전 선언이 되면 정말로 그런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 철수해라·감축해라, 한미연합사·유엔사 전부 해체해라, 한미 연합훈련 잠정 중단이 아니라 완전 중단해라’…… 국내외적인 봉기가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대북 협상력이 쇠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북 협상이 쇠퇴하면 북한 비핵화 협상을 어떻게 추동합니까?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퇴행시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보이는데도 자꾸 ‘추동된다’ 이런, 남이 써 준 그런 원고적인 말씀만 하시는 이 외교부가 너무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다른 것은 없으시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위원장 강석호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석 위원 정양석 위원입니다.

장관님, 최근에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퀸타나가 방문했습니다. 소위 류경식당의 탈북 여종업원들을 만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알고 있습니다.

○정양석 위원 그래서 이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어요. ‘12명 중에 일부만 인터뷰를 했는데 일부는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에 왔다고 한다. 또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중국에서 납치가 된 것이라면 범죄로 간주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걸 분명하게 조사를 해라’ 이랬는데, 탈북자를 다루는 통일부에서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자유의사를 거쳐서 들어왔다고 전달받았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이 퀸타나 특별보고관이 오는 10월 유엔 총회에

가서 이 내용을, 종업원들을 만난 이야기를 보고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우선은 이 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에 가서 ‘한국 정부가 개입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한 그런 입국이 있었다’라고 보고할 것이고, 그다음에 요즈음 북한이 계속 떠들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이것은 특대형 범죄다, 대한민국 정부가 개입된 특대형 범죄라고 공세를 할 걸로 보이는데 이것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장관께서는 영국 가셨을 때 영국 BBC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협상을 할 때에는 의제를 생각하고 우선순위를 생각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화의 진전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비핵화하고 평화에 방점을 두었기 때문에’라고 하면서 인권 문제를 못 다룬 데 대한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퀸타나는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인권법 제승인 법안에 대해서 7월 달에 서명을 했어요.

지금 굉장히 곤란한 위치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떻습니까? 유엔에 가서 이렇게 보고할 텐데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통일부 소관이지만 장관님은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독자적인 맨데이트(mandate)를 가지고 북한 인권만 다루는 그런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유엔에……

○정양석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정작 중요한 것은 북한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사항을 조사해야 될 이 보고관이 탈북한 종업원들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개입한 것으로 이렇게 본인이 듣고 보고서를 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에…… 정부가 개입한, 본인 의사에 반한 그런 강제 납치범이 되는 거예요, 이 보고서대로 한다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보고관의 보고서가 나오고 또 총회에 발표하는 내용을 봐야겠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자유의사에 의해서 입국한 것으로 기록이 다 남아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현장에서 대응할 그런 준비는 하

고 있겠지만 이 사안 자체에 대한 그런 입장은 더 이상 말씀……

○정양석 위원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아니, 이걸 유엔에 보고를 하면 분명히 북한은 잘됐다 하고 정치적 공세를 할 판인데, 다른 나라 평판과 달리. 그래서 이런 빌미를 주지 않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잘 알겠습니다.

○정양석 위원 유엔 제재 예외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당사자국으로서 여러 가지 예외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데 대해서 답변 잘하셨어요.

석단 문제는 또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북 간 군 통신선 복구사업용 휘발유 등을 북한에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 유엔 안보리에서 예외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항이 정부 발표가 아니고 일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고 국내 언론이 그대로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외교부에 여쭤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실무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는 보도하지 않을 방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승인 이후에도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아니, 정말 인도적 지원을 필요성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했다고 한다면 또 장관이 개입하셨다고 한다면 당당히 국제사회에 설명하고 국내 언론에도 ‘이런저런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제를 요청하고 이 사항이 이렇다’ 이렇게 밝혀야지 어떻게 당사자국인 우리가 일본 언론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건지, 우리 정부가, 우리 외교부가 정말 그렇게 감출 뭐가 있는 겁니까? 왜 이런 예외조항을 요청하고 또 유엔이 승인한 사항을 왜 일본 언론을 통해서 받아야 되고 외교부는 앞으로도 비보도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나는 이것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장관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안보리제재위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별도의 결의가 없으면 비공개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회원국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지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안보리의 절차라든가 권위를 존중한다는 뜻에서 우리 정부가 나서서 공개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

습니다.

○정양석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당사자국 아닙니까? 남북대화를 또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고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제삼자국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국민들한테 당당하게 밝혀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외교부의 태도는 맞지 않다, 그래서 많은 억측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에 있었던 많은 제재 예외조항도 아직 정부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들, 생각을 달리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그것은 정부가 나서고 외교부가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미 연합훈련 유예 관련해서 장관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핵화 추동을 위한 선제적 신뢰 구축이다’ 이렇게 말씀, 정말 어려운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유예가 됐습니다.

장관님, 한미 연합훈련이 유예가 돼서…… 왜 북한이 이렇게 유예 요청을 하고, 북한이 얻는 이익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북한이 그렇게 한미 연합훈련 유예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유예 조치는 8월에 있는 연합훈련 그리고 해병대 훈련에 한해서……

○정양석 위원 이유, 북한이 왜 그걸 요청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생각에는 왜 북한이 그렇게 여기에 목을 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북한은 우리가 하는 방어적 또 합법적인 훈련에 대해서 상당한 위협을 느껴 왔고 이 훈련을 유예할 것을 이번만이 아니라 훈련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 또 반대 이런 것을……

○정양석 위원 장관님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도 하나일 겁니다만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지요.

북한 군부는 우리가 연합훈련을 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대응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전쟁물자가 소요됩니다. 합동훈련은 그 존재만으로도 북한의 전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틈이 나면, 틈이 날 때마다 합동훈련을 중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

면 우리가 합동훈련을 유예함으로써 북한에게 제재에 대한 예외조항을 인정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경제적 예외, 군사적 예외.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목을 매는 겁니다.

그다음 단계가 뭐겠습니까? 자, 유예했습니다. 그다음 단계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종전 협상이라고, 종전 선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종전 선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지만 북한이 아무 대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성급하게 종전카드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나는 우리 입장에 맞지 않다, 또 국민들 그것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북한은 일단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했고요. 실험장을 폐쇄했고 또 미사일 실험장 발사대를 폐기 중인 걸로 나왔고 이런 의미 있는 조치들을 취해 왔습니다.

물론 이런 조치들이 향후에 겸증되고 확실히 폐기됐다 하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조치, 비핵화의 의지를 나타내는 의미 있는 조치를 한 것으로 미국이나 우리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비핵화에 대한 더 구체적인 조치를 견인해 나가기 위해서, 그것을 견인하기 위한 대화를 추동하기 위해서 이런 선의적인 신뢰 구축 조치로서 종전 선언을 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위원 강 장관님 반갑습니다.

지금 ‘의미 있는 조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그러한 조치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한다든가 발사대 폐쇄한다든가 이런 조치들이 의미 있는 조치라면 그것이 종전 선언의 충분조건이 된다, 될 정도의 의미 있는 조건이라고 보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말씀드렸듯이 종전 선언은 그런 조건을 기본으로 한 조치가 아니고……

○정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하고 같은 답변 이시네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정진석 위원 북한산 석탄 밀반입 사건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리는 사건이고 궁금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궁금증을 해소해 주질 않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사건인지 저도 잘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외교부장관께서는 이 사건을 처음 인지하게 된 것이 언제쯤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우리 정부가 이 정보를 입수한 직후에 제가 실무국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진석 위원 정보 입수.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정진석 위원 그 시점이 언제쯤이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작년 10월 초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진석 위원 작년 10월 초.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정진석 위원 작년 10월 초면 이 문제의 선박들이 한국에 입항한 후입니까, 전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바로 직전 또는 직후였던 걸로……

○정진석 위원 직전 또는 직후.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정진석 위원 그러면 문제의 정보를 입수한 것, 그 정보는 제삼국으로부터 입수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정진석 위원 미국으로 추정이 되는데 미국이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줬다라고 이해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정진석 위원 미국이 우리한테 정보를 줬을 때는 추측이 아니고 필경 구체적인 애비던스(evidence)가 있을 거예요. 위성사진이 됐든가 뭐가 됐든가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정부에게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 준 것이지요.

그리고 정보를 제공해 준 것은 분명히 유엔 제재 결의 위반과 관련된 그러한 문제 인식을 갖도록 정보를 제공해 준 것인데, 또 장관이 답변했듯이 문제의 북한 반입 선박이 입항하기 전과 후 두 차례에 걸쳐서 정보가 미국으로부터 왔는데 사실 우리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이거든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즉각 조사에 들어간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의 정보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첫 정보가?

○외교부장관 강경화 정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진석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대로 그렇게 추론은 할 수 있겠지요. 미국이 그냥 추상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 지금 이런 얘기가 됩니다. 북한산 석탄 밀반입 사건은 미국이 일부러 우리 정부에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우리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의지 부족이거나 이것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상당히 미흡했던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이것은 책임 소재를 가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재발 방지가 필요한 일이 아니겠어요? 이런 일이 계속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정진석 위원 그런데 장관님 답변은 조사 당국에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기가 좀 그렇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정진석 위원 그런데 9개월 동안의 조사는 관세청에서 이루어진 거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정진석 위원 관세청이라는 데가 선적하고 하역하는 원산지 증명서 서류 가지고 보는 건데 무슨 9개월씩이나 걸리며, 이것은 관세청한테 물어봐야 될 게 아니라 우리 정부에 처음으로 정보를 제공한 미국하고 상의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우리 관세청이 어떻게 그걸 파악을 합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의지가 없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정진석 위원 장관님, 이 중차대한…… 이것 철저한 한미 공조를 통해서 비핵화 협상을 이행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유엔에 계시다 오셨지만, 유엔 제재 결의라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했습니까? 관문점 회담을 만들고 싱가포르 회담을 만든 것도 저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가 큰 기여를 했다고 보

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엊그제도 폼페이오 장관이, 미국의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주의보를 발령하지 않았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정진석 위원 미국의 스탠스는 확고한 것 같아요, 일관되고.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정진석 위원 그런데 미국과 철저한 공조를 유지해야 하는 우리 한국 정부의 입장이 좀 미흡하다. 철저한 한미 공조의 균열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정부의 지금 이런 태도로 봐서는.

○외교부장관 강경화 이 건과 관련해서 한미 공조의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한 건, 한 건마다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조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리고 있습니다.

○정진석 위원 장관님, 그것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들었던 답변이고요.

그러면 국민들이 정말 이 문제는 신문 보고도 알 수 없고 장관 답변을 듣고도 알 수 없고, 청와대도 얘기 안 하고 외교부도 얘기 안 하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디 가서 진상을 이해하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이 문제를 추궁하고 따지고 그 해답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은 재발 방지가 필요한 사건입니까, 아니면 계속 이렇게 진행형으로 두고 봐야 되는 사건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이 건은 아직 조사가 결론이 안 났습니다만 저희가 다른 건으로 인해서 조사 결론을 내고 또 압류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세 건의 선박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정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문제가 된 이 건은 언제 조사 결과가 나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아마 관세청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진석 위원 아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재발 방지 면에 있어서는 정부가 지금까지 취한 여러 가지 조치로 업계에 상당한 경각심을 일으켰습니다.

○정진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 10월에 문제의 밀반입 선박이 입

항하기 전후에 걸쳐서 미국으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제공받았어요. 미국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바로 청와대에 보고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안보실을 통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정진석 위원 안보실을 통해서 보고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정진석 위원 그러니까 거의 동시에 청와대도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지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정진석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좀 더 추궁을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여러 질의가 나오고 저도 기다리다가 진이 빠졌는데 여야 위원님들의 인식의 차가 너무 커서 장관님도 참 답변하기 어려울 거예요. 어렵다는 것 인식하는데 지금 북핵 비핵화 협상이 순항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6·13 지방선거 즈음해 가지고 거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큰 기대를 가졌고 사실 낙관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남짓 지난 지금 그러한 기대는 우려로 바뀌고 있고 낙관론은 비관론으로 바뀌고 있어요. 제가 어제께도 통일부장관에게 지적했지만 대통령 지지도가 한 달 사이에 10% 떨어진 것은 경제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안보 문제,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깨지고 있는 거예요.

VOA 아시지요? VOA가 로버트 갈루치나 크리스토퍼 힐이나 전직 고위 미국 관료들, 북핵 문제에 정통한 관료들 20명과 인터뷰를 했어요. 그 20명의 공통된 얘기가 뭐니까? ‘북한의 비핵화는 절대 불가능하다.’

아마 장관님, 크리스토퍼 힐 잘 아시고 로버트 갈루치 잘 알 겁니다. 미국 내에서 최고의 북핵 권위자들이에요, 지금 있는 사람들보다 더. 그 사람들의 공통된, 20명의 미국 고위 관리의 답변은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예요.

다만 북·미 협상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 북한의 미사일 공격 능력을 방지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북한이 개발한 핵물질이 테러리스트들에게 전이되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북·미 회담은 그래서 필요할 뿐이지,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원하지만, 궁극적인 평화체제는 핵 없는 평화체

제를 우리는 원하는데 핵 있는 평화체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북한이 원하는, 바로 그것 전략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니까? 그때 제일 폭망하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핵 있는 평화체제, 핵 있는 평화체제.

장관님, 핵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자신이 있으세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것이 분명히 우리의 목적이고요.

○정진석 위원 목표이지요. 목표이지만, 목표는 다 세울 수 있어요. 그 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이 너무나도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저는 트럼프 대통령도 믿을 수가 없어요. 무슨 미군 유해 송환 되지도 않았는데 다 됐다고 발표를 하지 않나, 나는 좀 이상한 사람 같더라고. 그 정도로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경솔하고 참 경박하다, 너무나도 무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북핵 문제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에 관한 문제고 존망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정부도 너무나도 입장이 불분명하다, 일관되지 못하다, 그리고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확고부동하고 단호한 입장 이런 것을 외교부가 확립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목적 또 미국의 목적이고 국제사회의 목적입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은 국제사회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는 국제사회의 목적이기도 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수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혁 위원 이수혁 위원입니다.

어제 통일부장관한테도 유사한 질문들이 나오고 오늘 또다시 같은 주제의 것들이 반복 질의 또 답변되고 있습니다.

우선 종전 선언 문제는 어제도 토의가 되었는데, 판문점 선언 3조, 3-3항에……

그것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3조 3항에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문장을 내가 아무리 자꾸 읽어도 주어부와 술어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남과 북은…… 북·남·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주어부가 ‘남과 북’이고 ‘회담 개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가 술부.

그다음에 무엇을 협의하기 위한 것인가. 종전 선언을 협의하고 평화협정을 협의하고 평화체제의 구축을 협의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게 아니고 종전 선언은 딱 끝나고, 남과 북이 올해에 종전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정전협정을 대신한 평화협정, 평화체제 구축 이것을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이냐……

이게 지금 어디가 주부고 술부가 어디까지고 복합절인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저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문장상으로 볼 때? 종전 선언은 3자나 4자 회담에서 협의하는 겁니까, 저 문장으로 볼 때?

○외교부장관 강경화 종전 선언 또 평화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이수혁 위원 그러니까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과 평화체제 구축을 3자 또는 4자 회담에서 하도록 남과 북이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지요, 회담을?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이수혁 위원 그러니까 정전협정을 그냥 남과 북이 선언하는 게 아니고 이미 3자 또는 4자 회담에서 종전 선언을 협의하도록 하자는 거였잖아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3자 또는 4자.

○이수혁 위원 그런데 저기에 왜 하필 3자 또는 4자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는가요? 중국을 왜 뺏다가 넣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유연성을 갖기 위해서……

○이수혁 위원 아, 중국이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거나?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이수혁 위원 그런데 중국이 어느 경우도 참여하지 않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하여튼 그런……

○이수혁 위원 중국은 필히 참여한다고 할 텐데 왜, 무슨 유연성인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하여튼 중국에 대해서도 이 합의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또 그 이후라든가 계속 긴밀히 협의를 하고 상황입니다마는, 하여튼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의 그 유연성을 좀 갖기 위해서 3자 또는 4자 이렇게……

○이수혁 위원 제가 장관님 말씀을 받아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종전 선언은 남과 북이 하는 것 아니다. 3자 또는 4자 회담에서 협의하고 합의할 것이다’ 그런 얘기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혁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여태까지 해왔는데 자꾸 읽으니까 문장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들어오지 않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이수혁 위원 그다음에 ‘정전협정 체결 65년’을 저렇게…… 65년을 왜 강조했는가요? 무슨 의미가 있나요, 65년이?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올해……

○이수혁 위원 아니, 올해가 65년이고 내년이면 66년인데 65년이라는 숫자를 저렇게 찍어서 한 이유가 특별히 있는가. 이 초안 만든 사람들이 뭐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해석에 관해서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이수혁 위원 아니, 그런데 외교부가 초안 만들 때 관여 안 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안보……

○이수혁 위원 외교관들은 단어 하나하나를 넣을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데 굳이 65년이라는 얘기를, 100년이나 50년이면, 꺾이는 숫자들은 이해가 되는데 65년이 꺾이는 숫자도 아닌데 굳이 65년을 왜 넣었을까 그게 지금 제가 저것을 읽으면서 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도 외교부가 초안을 만들었으면 저것은 안 넣지 않았을까. 저 같으면 넣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년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꺾이는 숫자도 아닌데 의미를 부여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조기예……

○이수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목표를 올해로 삼아 그냥 ‘올해’ 해도 좋았을 텐데, 금년에는 빨리…… 꼭 65년을 집어넣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런 문장을 만들 때 어떤 치밀한……

일부 독자들이나 전문가들은 그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65년이라는 숫자가 정전이 이렇게 65년이나 장기로 지속되는 것은 비정상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이수혁 위원 그러면 아예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65년,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고 그렇게 썼으면 더 분명한 뜻이 전달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종전 선언에 이것을 올해까지 하자 하는 그 목적이 뭐냐 하는데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한 것이다. 뭐 다 좋은 얘기지요.

그런데 아까 우리 정진석 위원님도 그런 질문하시고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 그런 질문 하시는데 ‘정전협정이 선언되고 나서 북한이 요구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냥 정치적 선언으로 종전을 선언했다 하는 선언적 의미로서 끝나겠느냐? 아니다, 북한이 뭔가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하고 우려를 하는데 그중에는 유엔사 해체 문제가 나올 테고, 종전이 되었으니까 유엔사를 해체하라고 요구할 것 아니냐. 그것은 합리적인 추론일 것 같아요. 그다음에 외교관계를 수립하자고 할 테고.

우리 심재권 위원님이 어제도 질문하고 오늘도 질문했는데 미국의 적성국 교역법에 북한이 1952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적성국 교역법은 1차 대전 때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1994년 제네바 합의 후에 적성국 교역법의 상당한 부분을 제외시켰어요, 북한을. 그다음에 북한이 1999년에 모라토리엄을 발표하고 나서 적성국 교역법에서 또 상당한 것을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적성국 교역법을 미국이 원용해 가지고 제재하는 것은 없고 대개 안보리 제재 조치, 테러리스트 명단에도 포함시켜서 그 제재를 받고 있고 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적성국으로는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도 제외해 달라 이제 그런 요구도 나올 겁니다, 어제 심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것을 요구해 올 때 종전 선언은 선언적 의미밖에 없다 하고 우리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앞으로 협상에 있어서 분명히 제기될 수 있

는 그런 사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은 종전 선언을 하든 안 하든 북한이 비핵화를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북한 측에서 요구 사항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수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미 비핵화를 일이 년 안에 이루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타임테이블을 미국은 내놓지 않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북한이 제시하라고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일이 년 안에’ 얘기를 거둬들인 거나 다름없이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미국이 일이 년 안에 해결할 전망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하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맞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시간이 걸린다 하는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이수혁 위원 그렇다면 당초에는 금방 될 듯이, 되지 않으면 또 안 될 듯이 했는데 그렇게 좀 천연을 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는 뭡니까? 북한의 태도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건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막상 후속 협상에 있어서는 상당히 복잡한 이슈들이 다 논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조속히 협상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있겠지만 사안들을 생각했을 때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수혁 위원 그렇다면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아,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수혁 위원 제재 하나만 강요를 하고 그것을 압박을 가하면, 그것은 전략적 인내는 아니다 그 것인가요, 제재가 있기 때문에? 오바마 때도 제재 조치가 계속 있었는데요 뭐가 달라지는지 모르겠네요,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 지금 트럼프가 ‘일이 년 안에 해결의 전망이 없다’ 하고 ‘프로세스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선 핵 포기도 포기한 것 아닌가 하는 일부 야당이나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극명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제재를, 미국은 그 주의보도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엄격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제재는 몇 년 전의 제재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은 제재들이고요.

그리고 전략적 인내와 달리 지금 미국은 적극적으로 인게이지먼트(engagement)를 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북한과의 대화를 싱가포르 합의의 네 가지 사항을 실천해 내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후속 협상이 일차적으로 평양에서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 실무 협상에서 구체적인 그런 방안들이 더 논의가 된다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수혁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성 위원 장관,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상임위 질의 답변을 들으면서 같은 사안을 두고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그런 시각에 대해서 장관이 한번 잘 들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현실을 보면 정말 답답하고 한심한 그런 심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수개 월 전부터 당장 평화가 찾아오고 통일이 될 것처럼 국민들께 정도 이상의 평화 무드를 조성시키는 선전·선동을 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들뜨게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안보 의식만 무장해제시키고 실질적 북한의 비핵화는 얻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북핵폐기특위 위원장으로서 올해 3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서 진심 어린 걱정과 당부를 담은 우리 당 입장을 그동안 밝혀왔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무지개를 쓸 때 누군가는 낭떠러지를 살피면서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남북 정상이 만난 지도 3개월이 지났는데 지난 과정을 보면 북핵폐기특위의 걱정과 경고들이 마치 예언처럼 맞아떨어지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사단을 보내서 북한이 핵 포기의 진정성이 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도록 설득했습니다. 우리 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하고 미·북 정상회담이 예고되면서 마치 북핵 폐기가 코앞에 다가온 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북핵폐기특위는 마치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가 정착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면서 평화의 축포는 북핵 폐기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최후의 순간에 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9일에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바로 다음 날 4월 20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고, 세계적인 핵 강국으로 재탄생했다라고 표현했고, 핵무기 병기화 완결 검증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실상 핵보유국임을 전 세계에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한 것은 북한이 이미 핵폭탄 제조를 성공했고 대량생산 체제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핵실험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경고하면서 근거 없는 북한의 비핵화 희망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오히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발표문을,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 선언을 환영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북한이 이미 쓸모가 없어진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를 예고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로서 비핵화가 시작되었다는 중요한 의미라 하면서 또다시 현실을 호도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미·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모든 대화의 기본 원칙은 선 북핵 폐기, 후 평화 정착이어야 한다, 회담의 주요 의제는 반드시 북핵 폐기여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한 바 있었고,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문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북한이 비핵화 프로세스를 지연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과거 9·19, 10·4 공동선언보다 훨씬 못한 수준의 선언문을 가지고 과대 포장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동안 국제 공조에 의한 재재로 다급해져서 대화 테이블에 나왔던 북한은 남북·미북 정상회담의 외교적 성과에 힘입어서 여유가 생기자 태

도를 완전히 바꾸어서 7월 12일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서 핵무력 건설을 다시 꺼내 들었고, 7월 20일 노동신문에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갑자기 재판관이나 된 듯이 감히 입을 놀려 대는 것’, ‘쓸데없는 훈시질’, ‘황당무계한 상식 이하의 궤설’, ‘몽유병자의 장밋빛 환상’이라면서 모욕적인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이후 전혀 변한 게 없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지금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해체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장관은 아까 답변에서 의미 있는 조치라고 발언했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은 ICBM을 해체한다면 모를까 발사체 시험장 폐쇄 정도는 북핵 폐기 과정에서 크게 유의미한 조치는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빨리 종전 선언을 얻어 내려는 계산된 행동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시간표에 대한 합의도 없이 북한에게 시간만 벌어 주면서 절질 끌려가고 있다고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관은 지금도 북한의 핵 포기 약속에 진정성이 있고 반드시 지켜지리라고 믿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에 명시적으로 또 트럼프 대통령과의 서명을 통해서 확인한 공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입니다.

○김무성 위원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습니까, 장관은?

○외교부장관 강경화 앞으로의 행동을 통해서 확인을 할 것입니다.

○김무성 위원 우리 국민들의 3분의 2가 이것을 믿지 않고 있다는 여론조사 발표는 본 적이 있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여러 여론조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성 위원 북한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언제까지 핵을 포기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이것은 약속이 될 수 없다고 저희들은 지적합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우리는 북한 비핵화에 있어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데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끌려다니면서 북한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핵 폐기를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인 한미 연합훈련을 선제적으로 중지시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남북회담 중에도 한미 연합훈련을 지속 강화해야 한다, 북핵 완전 폐기 시까지 한미 연합훈련 등 군사적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완전한 북핵 폐기 전에는 주한미군 철수나 경계태세 완화 등으로 안보의 벽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강력한 억지력인 한미간 안보 공조는 더욱 튼튼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는데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핵물질과 핵시설 신고, 핵동결 등의 조치를 얻어낼 수 있는 중요한 지렛대인데 아무런 대가도 없이 중요한 카드를 버리는 최악의 수를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두게 된 것입니다.

한미 연합훈련이 없으면 우리 군의 안보태세라도 강화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우리의 독자훈련마저도 덩달아 무기한 연기해 버렸습니다. 또 현재 GP까지 철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의 근무 기간이 보통 2년 정도인데 그 기간에 훈련 경험이 없으면 한국의 전장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기계가 녹스는 것과 같아서 유사시 경험자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그만 양보들이 쌓여서 결국 우리만 일방적 군축을 강요당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의 장기적 중단은 주한미군 무용론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철수까지 언급하는 그런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벌써부터 남북경협을 이야기하고 남북 간에 철도를 놓아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을 지원한 대가가 결국 핵무기로 돌아온 것처럼 시간을 끌면서 원하는 것을 얻어 내는 북한의 기만전술에 똑같이 당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장관, 북한 비핵화가 지금처럼 지지부진할 경우에는 한미 연합훈련을 즉각 재개해서 강력한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연합훈련 유예와 관련해서는 8월에 계획되어 있었던 을지 프리덤 가디언하

고 그다음에 해병대 훈련, 이렇게 유예를 시킨 것이고 그것이 북한으로부터의 비핵화 관련 북한의 의미 있는 조치들을 기대하면서 선의의 조치로 한 것입니다.

그 밖에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한미 군사 당국 사이에 재고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훈련에 대해서는 북한의 조치를 보아 가면서 또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서 또 우리의 한미 간의 긴밀한 군사 대비 태세는 유지를 하면서 상황 관리를 해 나갈 것이다 이게 군사 당국의 입장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무성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와 미국의 입장은 북핵의 비핵화 아닙니까,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김무성 위원 그런데 북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북한도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무성 위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지요.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을 비핵화한다는 뜻인데 북한은 계속해서 한반도 비핵화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주장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 가동 중인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북한도 핵을 폐기하겠다, 이런 뜻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전 선언 오늘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장관 주장대로 종전 선언하게 되면 다음 조치가 됩니까? 다음 단계는 유엔사 해체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유엔사는 정전체제의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무성 위원 그러니까 종전 선언하게 되면 유엔사 해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아닙니다.

○김무성 위원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아닙니다.

○김무성 위원 아닙니까?

○이수혁 위원 왜 저한테 묻습니까?

○김무성 위원 경험 많으신 우리 이수혁 대사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더 정확한 답이 될 것 같은데……

○이수혁 위원 제 생각에 종전이 되었으면 유엔사 해체 요구는 당연히 나올 것이고, 그것은 뭐……

○김무성 위원 당연한 것이지요.

다음 단계는 당연히 유엔사 해체인데……

그것을 아니라고 장관이 답변하는 것은 참 장관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유엔사는 정전체제의 일부이고 정전체제를 대체하는 것은 평화협정이고, 평화협정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논의가 되겠지요.

○김무성 위원 그러니까 그 단계지요. 평화협정 까지 가기 전에 종전 선언 그다음에 유엔사 해체지요.

짧게 하겠습니다.

일본에 유엔사 후방기지가 7개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김무성 위원 일본에 있는 7개, 자마 요코스카 사세보 요코다, 가데나 후텐마 이런 오키나와 기지가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유엔사 후방기지입니다. 그러니까 유엔사 해체되게 되면 이 기능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북한이 우리나라에 침공해 내려올 때 유엔사 후방기지가 없어졌을 경우에 우리나라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장관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천정배 위원 국정에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외교는 우리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과 외교부 공무원들 또 산하기관의 임직원 모두를 응원하면서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회에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여러 국민들께서 제게 장관께 물어봐 달라 하는 요청이 있기에 질문을 드리는데요. 구

체적으로 전무형이라는 분, 양미강 님 이런 분들이 보낸 질문입니다.

‘장관님,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공식 사과, 장관 재임 중에 받을 것인가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은 연초에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기준에 있는 합의를 우리가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천정배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장관님 재임 중에 사과 받아 낼 겁니까? 그런 노력을 하실 겁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진정한 사과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천정배 위원 아니, 이유를 설명할 것 없고, 제질의시간……

그러니까 별로 외교적 노력을 안 하시겠다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답을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되시기 전에 ‘위안부 문제 해결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일본이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죄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것만 갖고 대일 관계를 끌어갈 수는 없는 거니까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천정배 위원 재임 중에 일본의 공식 사과 받으실 겁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받아 낼 수 있다’ 하고 이렇게 확신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일본의 입장도 있고, 또 그렇지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천정배 위원 지금 무슨 노력 하고 계신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일단은 위안부 문제를 대내적으로는 여가부 차원에서 피해자들도, 가족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지지 이런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외교부로서는 국제 업무를 담당하는 차원에서 국제사회에 이 문제에 대한 교훈을 담아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하고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는 거는 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을 잘 관리를 하면서 대화를 이끌어 내야 되겠다,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천정배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임기가 길면 3년 몇 개월이실 텐데 그런 노력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출연금 10억 엔 전액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 출연이 통과됐다는 것 사실인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러면 ‘이미 받은 일본 출연금은 지금 반환할 예정입니까?’ 이것도 네티즌 질문입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일본에 대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통해서 이것을 마련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일본과의 그런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천정배 위원 어쨌든 반환할 생각이신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반환이라는 그런 조치로 인한 일본의 반응을 생각을 하면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정배 위원 하나 마나 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화해·치유재단은 해산합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화해·치유재단의 향배에 대해서도 여가부 등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천정배 위원 해산을 지금 전제로 하시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결론을 딱 도출을 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천정배 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년 삼일절 100주년 때 아키히토 일왕의 방한을 초청할 의향이나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런 큰 외교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일본 측하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천정배 위원 저한테 질문 주신 국민 입장에서는 아무 답변이 안 됐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넘어가지요.

지금 북한산 석탄 문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 7월 17일 날 미국의 소리에 오보가 있었던 거지요. ‘한국 내에서 북한산 석탄이 세탁됐다.’

그런데 이거 상당히 심각한 오보 아닙니까? 그

리고 한국이 유엔의, 국제사회의 제재를 결국 그냥 무시하고 있다, 어기고 있다 하는 누명을 쓴 셈인데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외교부가 해명 자료를 낸 것이 3일 뒤더라고요.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위를 파악을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분명한 결론이, 그야말로 북한 석탄 관련해서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사안이다 하면 그 위반은 그 업체……

○천정배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미국의 소리의 보도는 북한 석탄이 한국에서 환적됐다는 것 아닙니까? 환적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작년 10월부터도 이 문제를 면밀히 주시하고 조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환적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 보도를 접하자마자 제가 보기에는 1~2시간 이내에 이걸 오보였다고 하고 해명 자료를 냈어야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3일 동안 끈 것은 굉장히 늄장 대응이고 이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인데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조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환적이 분명히 됐다 하는데……

○천정배 위원 아니, 환적조차도 그러면 확신 못 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잘 밝혀지고 있지만 결론이 다 안 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결부된 선주라든가 나라 등의……

○천정배 위원 그 말씀은 굉장히 서운한 말씀입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래서 어떤 피해자로서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성이 있기 때문에……

○천정배 위원 아니에요. 그것이 결론이 안 났으면 지금까지도 해명 자료를 못 냈지요.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 해결 안 됐지 않습니까, 작년 10월 이후에? 제가 그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한국 내에서 환적됐다고 했단 말이에요. 환적이 안 된 것은 즉각 1~2시간 만에 해명할 수 있었던 일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제가 그것은 좀 경위를 조사하겠습니다.

○천정배 위원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예요. 이것을 3일씩 걸리면 안 되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에 좀……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저희가 그 보도자료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보도 백그라운드 브리핑은 외교부 출입기자들 상대로 당일 날 두 번 했다고 지금……

○천정배 위원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 예컨대 자유한국당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이야기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저조차도, 우리나라의 여러 언론이나 여러 정당 이런 쪽에서 정부를 매우 비판하는 것 나왔는데 그것을 말로만 했다고요?

하여튼 이 문제요……

제 시간이, 사실은 지금 서론도 안 끝났는데 제 시간이 끝나 버리네.

그러면 어쨌든 이 문제는 한번 서면으로 왜 이렇게 3일씩이나 걸렸는지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재발 방지책이 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다 가버렸는데요.

아까 이수혁 위원님 질의를 들으면서 저도 판문점의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의 이 문장이 극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문으로서는 어법에도 맞지 않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그렇다 치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영문본 어디 있느냐 하고 제보좌관한테 물어봤는데 남북 간이기 때문에 우리 한글본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올해 내로 종전 선언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남북 정상 간의 합의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이게 전체 문장으로 보면 마지막에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천정배 위원 그것을 나가기로 하였다니까, 그러니까 종전 선언도 3국 간 회담, 3자 또는 4자 회담의 개최를, 그것도 적극 추진해 가니까 몇 단계로……

그러니까 올해 내로 종전 선언 하자는 합의가 남북 정상 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올해 안으로 한다는 합의입니다, 종전 선언을.

○천정배 위원 종전 선언을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천정배 위원 그런데 이 문장으로는 그렇게 사실 안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것은 남북 간에 올해 새로 종전 선언을 한다는 거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천정배 위원 그러면 정상회담의 합의면 거기에 무슨 조건이 있었습니까? 무조건 하려고 하는 겁니까? 물론 종전 선언은 남북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최소한 미국이나 중국을 더 넣든지 해서 3자, 4자가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우선 다른 제삼국, 4국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남북 정상 간에 종전 선언의 무슨 조건이 있었습니까? 이러이러한 요건을 이행해야만이 선언하겠다고 하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합의 사항은 그 선언에 담겨 있습니다. 그 이외의 그런 어떤 조건은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천정배 위원 그러면 적어도 남북 정상 간에는 무조건 선언한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이해해야 됩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 영문본이 있습니다.

○천정배 위원 영문본이야 번역한 것이지 그것을 원본이라고 볼 수 없지 않겠어요? 남북 정상 간에 영문본을 정본으로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아니, 찾으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천정배 위원 그 번역을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해를 했는지. 그 번역을 우리 당국자가 했겠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천정배 위원 했더라면 그 당시에 도움이 됐겠네요. 영문본을 저희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호 더 하시겠습니까?

○천정배 위원 예.

○위원장 강석호 1분 더 드려요.

○천정배 위원 그러면 종전 선언 문제는,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포괄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를 재확인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럼으로써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연내 종전 선언을 합의해 줬다고 이해할 수 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천정배 위원 오늘도 노동신문 이런 논설 등으로 보면 북한은 종전 선언을 위해서 상당히 몸이 달아 가지고 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 정부의 태도도 지금 무조건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미국이 종전 선언에 대해서 소극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미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비핵화를 견인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로서는 선의적인 조치로서 이것을 하자, 그리고 이것을 평화협정으로 나가는 초기의 조치로서 하자는 얘기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천정배 위원 이 말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합의한 것이 바로 종전 선언을 연내에 하겠다고 합의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무슨 조건을 내걸었습니까? 무조건 하겠다고 했습니까, 조건을 내걸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자세한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겠습니다.

○천정배 위원 지금 와서 그러면 미국이……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종전 선언을 연내에 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조건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 와서 미국이 딴소리 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협의 이후에 맘이 바뀌어져서 지금 합의를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미·북 사이의 합의 내용은, 문서화된 합의는 굉장히 개괄적이지만 그것을 풀어 나가는 데에서는 하나하나가 다 복잡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 나가면서 협상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뭐가 선후가 되고 어떤 것이 상으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실무 협상에 들어갔을 때 그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의지가 찍힌 것이 싱가포르 합의고요. 그 의지를 구체적으로 실무 협상에서 풀어나

가는 데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천정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명확하게 종전 선언을 하겠다고 했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도 나온 것을 보면 다음 달, 8월 중으로 3자 또는 4자 간의 종전 선언을 우리 정부가, 대통령께서 추진한다, 이렇게 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사실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렇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천정배 위원 아니, 외교부장관이 아는 한도 내에서 없으면 없는 거지.

그리면 다 오보입니까? 오늘 청와대나 외교부에서도 오보라고 그것을 해명하거나 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추측성인 것 같습니다.

○천정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석호 천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저도 간단하게 뭐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북한의 석탄 환적 논란이 있었는데요. 북한의 석탄 환적, 그러니까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는 것 이 부분은 과거부터 업계에서는 관례로 된 사항이었어요. 한국의 석탄 수입업자, 브로커가 중국이나 러시아에 부탁을 하면 거기에서 북한 업자를 연결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대북제재가 없었을 때는 북한에서 바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은 북한의 대북제재 유엔 결의안 2371호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브로커가 러시아나 중국의 업자에게……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하나는 북한산, 이게 분탄인데 품질이 좋고 가격은 좀 비쌉니다. 북한산으로 구해서 원산지 변경을 해서 러시아나 중국에서 다시 환적을 해서 갖고 와 달라는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

아니면 두 번째 케이스는 중국산이나 러시아산 석탄을 구매하겠다고 한국의 브로커가 중국이나 러시아에 얘기를 하면 애네들은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어떤 때는 북한산 석탄이 중국이나 러시아에 유엔 제재 조치 이후에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들어가서 바로 거기에서 원

산지 변경을 해 가지고 우리 쪽 앤드 유저로 온단 말이에요, 중간 브로커가 사 가지고.

그러면 두 번째 사항은, 실질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하고 거래를 했다는 이게, 유엔 제재 결의안 후에, 밝혀진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외교부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상당한 항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제가 두 가지 케이스로 생각이 듭니다.

현재 많은 언론들이 이 부분을 추적을 대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외교부나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그리고 각 모 기관에서는 그것을 핸들링한 업체 그다음에 마지막 앤드 유저 이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는 ‘함구해라’, 이런 것까지 지금 소문이 돌고 있다 이러니까 괜히 우리 외교부에서 나중에 오해를 받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달려들어 가지고 이 경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과거의 관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제재가 걸렸다고 해서 이게 한꺼번에 사라질 관행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강석호 그러니까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기 때문에 제재가 발동이 된 이후에 정부로서는 우리가 그 정보를 입수하는 대로 정부가 할 필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조사도 하고 이것이 입증이 됐을 경우에는 선박도 억류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박과 관련해서 제재 이행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이나 안보리 제재위가 상당히 우리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의 결과 지난 10월 이후에는 석탄 불법 환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정보가 최근에는 입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없어졌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정부의 노력의 결과 업계에서도 상당히 조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석호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을 빠른 시간 안에 내놓으시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설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호 이제 1차 질의가 끝났고요. 보충질의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사실 보충질의까지 할 그것은……
○위원장 강석호 보충질의는 5분으로 할까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금방 끝내겠습니다.

그냥 좀 짧瘁해서 몇 가지만……

우선 한·아프리카재단이오.

이사장님!

○한·아프리카재단이사장 최연호 예.

○이정현 위원 참 기가 막힙니다. 재단 만들어놓고 운영비 2억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기가 막힌데 오늘 보고한 것 보니까하시는 일들이 2억도 많은 것 같아, 보니까. 무슨 교류 협력 지원하네, 자료 조사하네, 또 진출을 지원하네, 또 무슨 동호회를 발족하네, 청년 뭐 하는 연구보고서 만들고 학술포럼 하고 기반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예산 못 땅니다. 요령이 없으신 것 같아.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기재부가 돈을 주겠습니까?

○한·아프리카재단이사장 최연호 그래서 금요일 날 위원님 사무실에 가서 설명드리기로 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하여튼 다 마찬가지지만 저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대신 이런 식으로 말고 상당히 구체적이고, 또 다른 재단에서 하고 있는 그런 걸 참고로 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아프리카재단이사장 최연호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집행해서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그다음에 장관님.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이정현 위원 아까 이수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그래서 1·2·3·4항을 다 뽑아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 말하자면 외교부에서 지원하신 분이 작성한 것 맞습니까? 외교부 직원이 지원을 한 것은 맞습니까, 문장 작성하는 데?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남북 결과 문서에서는 안보 부처가 다 관여를 했지만 외교부가 직접……

○이정현 위원 아니오, 문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장을 누가 다듬었나 하는 겁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외교부는 아닙니다.

○이정현 위원 아니고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이정현 위원 뒤에 외교부 여러분들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요, 국어학자까지는 아닐지라도…… 이것은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가고 두고두고 남는 것인데 오늘도 판문점 회담이라는 소리는 아마 몇 번 더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문장을 보면 사실 1번부터 4번 까지 전체가 다, 이것은 진짜 한번 초등학교 가서 국어시간에 문장을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가르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해석 꼭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이겁니다.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남과 북이 주체가 돼 가지고 종전을 선언하고 종전협정,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해 놨는데요, 여기까지가 저는 끝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남·북·미나 남·북·미·중’ 여기가 주어가 돼 가지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또 별도로 추진해 나가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석이 안 된다면 이 문장을 만든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솔직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아파트 매매 문건이다 생각을 하고 남과 북을 갑과 을로 해 가지고 매도자와 매매자로 딱 바꿔 가지고 해 놨을 적에 이 문장을, 이런 계약서를 가지고 아파트를 사고 팔 수 있는지 여러분 오늘 가서 꼭 한번 읽어 보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의 전 재산인 아파트를 이렇게 문건 계약서 작성해 가지고 넘길 수 있겠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말 애매모호하고, 그런데 이것을 오늘 하루 종일 정말 아주 대단한 권리장전이나 무슨 장전처럼 얘기를, 인용을 했는데 보니까 문장이 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거시기합니다.

그다음에 위안부 그 문제, 그냥 이것은 간단하게 장관님께 한번만 여쭤볼게요.

아까 사과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외교부가 하려고 하는 그게 문제가 뭐지요? 지난번 그문장에는 일단 사과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내각 대신 누가 어찌고저찌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과를 받아 내겠다 그것은 아니시잖아요. 외교부가 하려고 하는 건 뭐지요? 위안부 문제, 지금 남아 있는 가장 큰 문제.

○외교부장관 강경화 외교부는 어떤 국제적인 인권 이슈로서 위안부의 교훈을 새긴다 하는 차원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사업이라든가 국제회의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정현 위원 아니, 일본에서 받아 내려고 하는 게 뭐냐고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일본에서부터는 결국은 진정한 사과를 받아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사과는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과하는 측에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야말로 일본의 의지입니다.

○이정현 위원 저도 전적으로 그 점에 있어서 공감하고 동의를 하는데 아까처럼 앞뒤 그런 말 다 생략하고 그냥 ‘사과를 받아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전에 사과가 여러 형태가 있었고 또 문장으로까지 있었기 때문에 조금 공격을 받을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그다음에 같이 우리 위원회에다가 견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아까 리치 글로리호하고 엔젤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의혹과 의문을 품고 있는데요. 사실 기재위원회, 관세청이나 법무부도 관련돼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상임위 차원에서 공동으로, 뭐 국정조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야 위원님들이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혹을 품고 있는데 국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내가 봐도 외교부에 이것을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관할로는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합동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 견의드립니다.

○위원장 강석호 잘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수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혁 위원 우선 아까 종전 선언 후에 북한이 요구할 것이 뭐냐 하는 얘기가 오가면서 김무성 위원이 저한테 불쑥 질문을 했기에 유엔사 해체를 요구할 것이다……

그런데 제가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북한이 요구할 것이 유엔사 해체지 저는 종전 선언이 되면 유엔사를 해체해야 된다, 그 주장을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몰라도 유엔사는 정전협정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이미 7월 달에 유엔군을 파견하기로 안보리와 권고 결의안을 채택할 때 그때 유엔사 설치가 권고된 겁니

다. 그래서 50년 7월 달에 유엔사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전협정하고 유엔사하고는 직접 관련 있는 건 아니고 정전협정을 종전 선언이 리플레이스(replace) 하는 건 아니더라도 전쟁이 종결된 것이기 때문에 유엔사의 존재는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하고 북한은 주장할 것이고, 아마 그렇게 끊임없이 주장할 겁니다. 그런데 유엔사 해체하고 주한미군 철수하고는 또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이수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또 일부 오해가 있으실지 몰라서 하고.

그다음에 핵 문제는 해결할 때 과거·현재·미래, 시간적으로 3개의 시간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핵실험장이나 미사일 발사장인지 실험장인지 하여튼 미사일 실험장, 발사대는 미래에 관한 것이지요. 앞으로 더 이상 쏘지도 않을 테고 자기 약속대로 이제 안 하는 거지요.

그렇지만 과거와 현재의 핵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북한 핵 문제를 중요시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핵 때문에 중요시하는 거지, 미래는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두 핵실험장이나 미사일 실험장을 폐쇄한 것은 의미가 없지는 않되 미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만들고 안하겠다 하는 것일 뿐 현재 있는 것이 위증하므로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놓치면, 초점이 흐려지면 미래에 더 이상 발사하지 않는 걸로 만족할 수 있다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과거와 현재 핵이 더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즈음에서 저는 늘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뢰하되 검증하라, 그러니까 베리파이(verify) 하는 문제는 포기할 수 없는, 농축우라늄의 경우에는 총량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검증이 거의 불가능한 거다, 그것은 전문가들이 다 수용하고 있고 아마 그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초에는 다 베리파이 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검증되지 않을 부분들이 과거의 핵, 현재의 핵에 있어서는 있다 하는 그런 판단을 이제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이 낸 안에 쉽게 사찰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판단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야 하고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재 조치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재 2397호가 작년 12월에 채택될 때에는 작년 11월에 발사된 ICBM 화성 15호 때문에 조치가 취해졌는데 더 이상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한 2397호는 해제해도 되는 것 아니냐—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에—그런 주장을 중국 측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는데 전문가가 저하고 만나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2397호는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한 그 결의는 충족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그 제재 조치는 해제해도 된다 하는 것이 중국 전문가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리를 개발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성국 교역법, 옛날에 제가 수석 대표 때나 워싱턴에 근무할 때 4자회담하고 할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TWEA라고 하는데 Trade With Enemy Act라고 하는 거지요. 그때 북한이 이것 폐지하라고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어요. 요즘에 그게 사라졌는데 1917년도에 만들어진 적성국 교역법의 연혁과 발전사, 독일도 1차 대전 후에 다 포함이 돼 가지고 전쟁 끝난 후에 제외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이 이 교역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많이 해제가 됐어요. 지금도 그 제재를 받고 있는, 그 제재 내용이 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석 위원 외교부 본연의 업무 중에 핵 협상, 핵 문제에 관해서는 외교부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국내 상황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라든가 또 북·미 정상회담이 외교부 중심이 아닌 청와대 중심 혹

은 국정원 중심 때문에 외교부가 이런, 외교부가 개입했으면 아까 그런 문건도 안 나올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스템화 되지 못해서, 그나마 미국의 국무장관이 폼페이오로 바뀐 뒤에 그래도 우리 외교부가 중심을 잡아 가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좀 슬프지만 들립니다.

최근의 북·미 정상회담을 보면서 이렇게 평가들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의 달인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북한 체제, 김정은에 대한 준비도 없었고 분석도 없었고 결국 회담에서 실패했다. 그 반대로 북한은 3대 세습을 해 오면서 축적된 정보와 노하우 그리고 상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살라미 전술도 써 가면서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지키고 있다, 외교적으로는 북한이 승리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그런 배경에 대해서 북한에서 오랜 외교관 생활을 했던 태영호 공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 외교가 왜 강한가? 그것은 벼랑 끝 외교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생존을 위한 외교다, 그리고 외교 라인이 다행히 숙청이 안 됐다, 그래서 지속되고 또 외교관의 전문성을 중시한다, 정권이 바뀐다고 통째로 바뀌거나 경력을 쌓아 주기 위해 이곳저곳 보내는 사례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북한과는 시스템이 다르지만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근에 상하이 총영사, 박선원 총영사가 6개월 만에 국정원으로 간다고 합니다. 아마 북·미 회담의 전문가라고 생각,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쉽지만 외교부장관님께서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내가 데려다 쓰겠다, 외교부가 북·미 회담의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쓰겠다, 왜 국정원이 데려가느냐’ 나는 이렇게 나섰으면 좀 더 우리가 자존심을 살리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이야기했듯이 이제 경험과 지혜, 그분의 경험과 지혜보다는 원칙이 중요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 지혜, 나는 이것 있다 해도 타임은 지났다고 보입니다.

늘 거론됐지만, 얼마 전에 방위비 협상을 주도했던 황준국 영국대사가 결국 옷을 벗었습니다. 북한 외교와 우리가 대비가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유능한 외교관들이 정권이 바뀌면서 적폐 청산이라는 이유로 다 옷을 벗습니다. 위안부 합의에 관련된 분들도 다 옷 벗었습

니다.

확인 안 된 이야기입니다만 최근 외교관들 사이에 그런 자조감과 불신감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외부인을 만날 때는 녹음하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공관에서 작성되는 외교전문의 질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고 하는 우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제 상황보고에 본인의 소신이나 의견을 적지 않는다, 이 보고서가 어떤 불이익이 돼서 나한테 날아올지 모르니까 이제 그런 것은, 의견이나 판단은 쓰지 않는다, 사실관계만 한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장관님, 다 인정하기 힘든 그런 사항이겠습니까만 이런 부분 잘 추슬러 가시면서 정말 외교부가 핵 협상을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워싱턴 포스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지금 비핵화가 교착이 됐는데 한국 정부가 잘못된 관여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강경했다가, 그래서 2년 만에 폐기하겠다, 아니면 볼턴은 1년 만에 하기로 했다가 이제 서두를 필요 없다, 시간제한·속도 제한은 없다고 이렇게 바뀐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관여했다고 보도를 합니다.

뉴욕타임스 7월 4일 자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최근 CVID라는 용어를 언급하지도 않고 장관 어조도 누그러뜨린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모든 것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버릴 것을 한국 측이 강력하게 권고했다고 전합니다.

제가 장관님에 비해서 발음이 안 좋지만 이렇게 돼요, 'the everything-must-be-dismantled-immediately approach' 이런 표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왔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우리 정부의 반응은 어떠냐고 그러니까 시인도 부인도 확인해 주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오해라고 생각되지만 이런 부분들, 국제사회에서 우리 외교부가 정말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보충질의를 통해서 몇 가지 제 소회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우려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교부라고 하는 큰 조직을 운영하면서 부 내의 직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외교부 전체로서는, 특히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교부가 그야말로 노하우를 갖고 있다, 그래서 미국하고의 조율이나 북·미 비핵화 협상을 해 나가는 데서 외교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해야 한다 또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선원 총영사의 사직도, 새 업무 부여에 있어서는 본인의 의사고, 그래서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되었고, 외교부로서는 말씀드렸듯이 지금 있는 전문성으로서도 외교부장관으로는 충분히 신뢰가 가고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직원들의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인사조치는 사안마다 좀 다르지만 충분한 조사와 절차를 거쳐서 경중을 따져서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인사위의 심의를 거쳐서 내린 조치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정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천정배 위원 장관님, 우리 정부가 한반도 문제의 운전자로 때로는 북·미 간 대화·협상의 중재자로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동력을 살려 가야 되겠지요.

그러면 우리 정부의 비핵화 문제에 관한 기본 방향은 뭡니까? 대체로 그동안의 자료나 말씀하신 걸로 보면 포괄적·단계적 협상이다 이런 말씀들을 쓰고 있어요. 그걸 좀 간명하게 한두 마디로 설명하신다면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북한의 핵·미사일 WMD 프로그램이 상당히 진전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뤄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문제가 복잡한 만큼 한꺼번에 모든 조치를 이루어 낼 수는 없다 하는 그런 현실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이라는 것이 상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긴 호흡을 갖고 이것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천정배 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맞는지 한번 좀 들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핵화의 내용 그리고 그 비핵화의 단계별로

한국과 미국 등이 취할 상응하는 조치 그리고 그 일정, 타임 테이블에 대해서 당사국들이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그 합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테이블에 놓고 협상해서 합의를 하되 그리고 그 합의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시간도 걸리고 단계별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큰 틀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정배 위원 달리 말한다면 이게 문제가 위낙 복잡하고 어렵고 또 상호 연결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짤끔짤끔 협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씩 해결해 간다는 것은 무망한 일이고 또 단편적 합의도 무망한 일이기 때문에 또 불신이 너무 큰 상대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도 합의 자체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합의한다, 그것은 합의 내용뿐만 아니라 각자 행동 대 행동이라든가 말 대 말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합의의 이행의 절차와 시간에 관해서도 모조리 다 포괄적으로 합의해 놓고 나서 단계적으로 이행한다, 그런 점에서 포괄적 타결과 단계적 이행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은데 맞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큰 틀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천정배 위원 저는 이 방안이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과 북한도 우리의 이런 기본 방향에 동의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계속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정배 위원 그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천정배 위원 저는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려서 그렇게 될 정도면 이런 정도는 이미 타결이 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일단 정상회담부터 내질러 보고 그다음에 무슨 협상을 한다고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정상회담을 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아주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정상 차원의 의지가 실린 상황에서 이행이 또 로드맵도 만들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천정배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요, 포괄적·단계적 어프로치랄까요? 우리 정부의 이 어프로치에 대해서 그러면 북한이나 미국은 어떻게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 번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입장이 다릅니까? 3국의 입장이 서로 다릅니까, 아니면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협상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출현될 의견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래요?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잘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그 문제 자체도 어렵지만, 아무리 그래도 3국 정상이 각각 만나고 긴밀하게 했는데 그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합의가 안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북정상회담의 합의가 나왔을 때 완전한 비핵화 이렇게 돼 있던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있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CVID니 이런 게 다 안 됐느냐 하니까 대체로 그 때 이야기는 이 문제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해결할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에도 그런 이야기까지는 안 나오고 또 남북정상회담했던 것 비슷한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거기다 무슨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유해 문제 정도가 덧붙여 있어서 저도 사실은 원래 기대했던 것과 또 우리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했던 이야기하고는 차질이 생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모든 게 진행이 된다 하면 협상이 필요 없겠지요. 그런데 이런 어떤 계기마다 사전에 준비가 있었고 그 협상의 결과로서, 현장에서 회담의 결과로서 나오는 것들이 결과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있지만 그 결과는 협상의 결과로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단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천정배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최근에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 기고문을 쓴 젤리코(Zelikow) 교수라는 분을 제가 잘

몰랐는데 과거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한 분이라면서요.

이 사람이 ‘비핵화 협상에만 전념하면 결실을 맺기 어렵다, 오히려 6개의 협상 트랙을 제안하면서 여러 가지 미래 남북관계, 대북제재, 심지어는 인도주의, 인권 문제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여섯 가지 트랙을 동시에 별도로 가동시켜서 가능성이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제가 이해하는 포괄적, 단계적 어프로치를 구체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장관께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젤리코 교수의 견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저도 일견 읽어 봤습니다만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비핵화에만 앞으로의 협상이 한정된 것은 아니고요.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도 비핵화가 네 가지 핵심 사안 중의 하나입니다. 그 나머지는 유해 송환·반환이 하나 있겠지만 첫 번째, 두 번째는 북·미 관계 개선에 관한 문제고 전반적으로 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합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가 물론 핵심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넓은 틀의 합의가 성가포르 합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포괄적인 합의였다. 그것을 기본으로, 거기에 담긴 정치적인 의지를 기본으로 앞으로의 그런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천정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오늘 외교부와 외교부 산하기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님, 진영 위원님, 추미애 위원님께서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질의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답변 자료, 우리 위원회에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외통위가 구성된 후 외교부

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처음으로 실시된 오늘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평소 가지고 계신 외교정책에 대한 기본적 방향, 철학을 잘 피력하시고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재검을 한 그런 뜻깊은 자리였다고 봅니다.

정부 측에서도 오늘 업무보고를 계기로 그동안의 성과뿐만 아니라 부족하고 미진했던 부분도 함께 성찰하면서 건강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에 매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 지적사항 그리고 정책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끝까지 남아 주신 이정현 위원님 그리고 정양석 위원님, 이수혁 위원님, 천정배 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경화 장관을 비롯한 각 산하기관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산회)

○출석 위원(19인)

강석호	김무성	김재경	송영길
심재권	원혜영	유기준	윤상현
윤영석	이석현	이수혁	이인영
이정현	정병국	정양석	정진석
진영	천정배	추미애	

○청가 위원(2인)

박병석 박주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종호
전문위원	유상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외교부	장관	강경화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이도훈	
차관보	윤순구	
대변인	노규덕	
기획조정실장	서정인	
의전장	이우현	
경제외교조정관	이윤강	
국제안보대사	문덕호	

해외안전관리기획관	이	재	완
동 북 아 시 아 국 장	김	용	길
북 미 국 장	김	태	진
아프리카 중동국장	홍	진	욱
원자력·비핵산	임	상	범
외교기획관			
외교안보소장	김	인	철
기후변화대사	유	연	철
국제기구국장	권	기	환
개발협력국장	오	현	주
국제법률국장	배	종	인
공공문화외교국장	홍	석	인
양자경제외교국장	김	희	상
북핵외교기획단장	정	연	두
평화외교기획단장	이	충	면
국립외교원장	조	병	제
한국국제교류재단			
이 사 장	이	시	형
기 획 협 력 이 사	강	영	필
교 류 협 력 이 사	김	성	인
한국국제협력단			
사회적가치경영본부장	송	진	호
사업전략·아시아	정	우	용
본 부 장	백	숙	희
아프리카·중동·중	설	경	훈
남 미 본 부 장			
글로벌파트너십본부장			
재외동포재단			
이 사 장	한	우	성
기 획 이 사	오	영	훈
사 업 이 사	기		춘
한·아프리카재단			
이 사 장	최	연	호
상 근 이 사	김	기	연